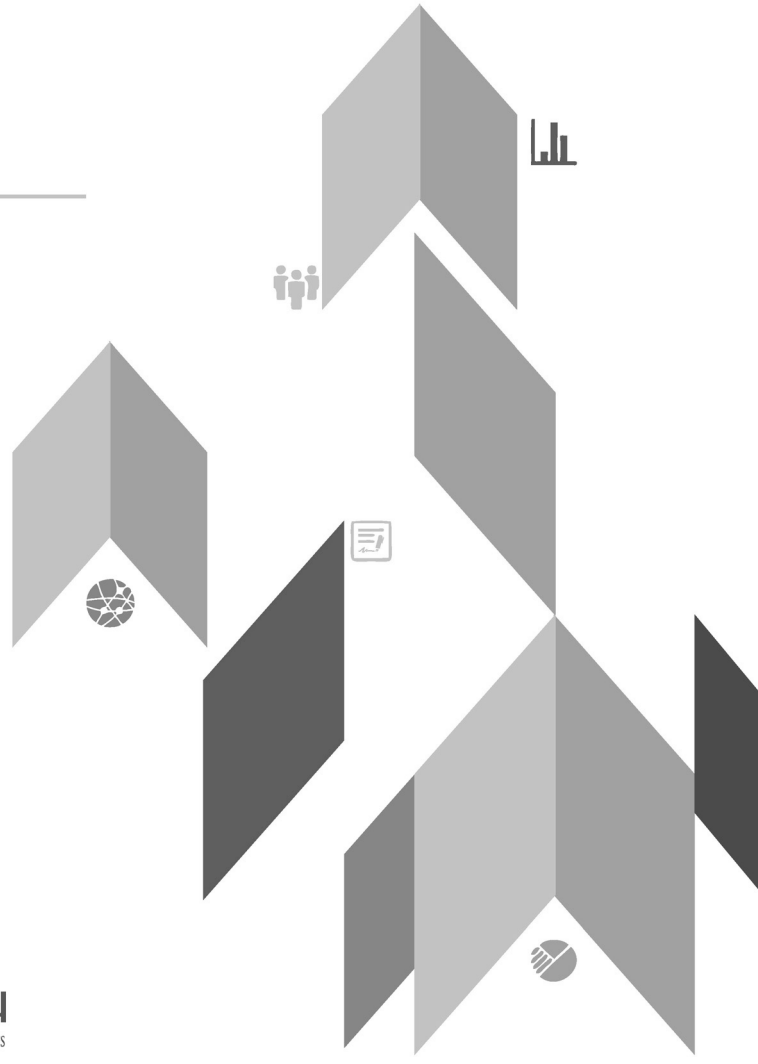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 – 01 – 01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동아시아 문화협력체 추진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수 경**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01-01

동아시아 문화협력체 추진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김수경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동아시아 문화협력체 추진방안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9-01-01	동아시아 문화협력체 추진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통일연구원	김수경 부연구위원 (총괄책임자)	
협력 연구기관	한국국가정보학회	허태회 회장	박진수 조교수(덕성여자대학교) 김일기 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백봉정치문화연구원	라종일 원장, 국방대학교 석좌교수	이택선 외래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제 출 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동아시아 문화협력체 추진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월

통 일 연 구 원
원장 김 연 철

국문요약

탈냉전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동아시아는 인접한 국경보다 훨씬 먼 심리적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의심과 경계, 불안과 반목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역내 만연한 민족주의 정서가 지역화합을 저해하며 미래지향적 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상호 이해와 소통의 장치로써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문화적 측면에서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동안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나 군사 및 경제와 같이 국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의 사안과 연계되어 있어 그다지 성공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이론을 종합하는 '전략적 선택주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문화협력체 형성을 위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현실주의가 강조하는 국가의 주도적 역할,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협력의 효율성, 구성주의가 강조하는 정체성의 효과를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동아시아 여건에 적합한 공동체 비전과 추진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정치학과 인문학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국제정치학자들은 협력의 발생을 국가 간 힘의 논리로만 설명하거나 인문학자들은 복잡한 정치동학에 대한 계산 없이 문화콘텐츠 연구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국제정치학적 접근과 인문학적 접근을 결합하여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동아시아 문화협력은 주로 한·중·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3국 정상회의' 중심의 관(官) 주도로 대중문화, 관광협력, 교육 분야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관이 주도하는 문화협력은 역사분쟁이나 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보다 지속가능한 교류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의 호응과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공식 상설기구로서 '동아시아 문화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민간에서 실행하는 '동아시아 문화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세대에게 문화협력의 중요성과 지역공동체 정신을 함양시킬 '동아시아 대학'을 설립하여 민관(民官)이 상호보완적으로 동아시아 문화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문화협력은 단기간에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거시적인 담론이며 20~3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처음부

터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하기보다는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인프라 구축' → '문화협력의 확산 및 공동체 의식 고양' → '문화 공동체의 창설'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보다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로드맵을 추진함에 있어 ① 단기적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문화협력 체계를 창출 ② 지나친 정치적·민족적 편향 및 접근방식을 지양 ③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과 창조적 융합을 지향 ④ 전통의 부정이 아닌 과거에 대한 창조적 성찰과 현대적 재해석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지역이며 오랜 시간동안 찬란한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비판적 성찰이 수반되지 않는 과거와 전통은 새로운 미래 창조의 씨앗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동아시아 문화협력은 과거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미래에 대한 진취적 구상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도록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Despite globalization and growing interconnectedness, there have been lingering mutual doubt, mistrust, and antagonism among East Asian states. Widespread nationalism is one of the causes, which has disrupted cooperation and future-oriented communications among the states. This current situation raises the necessity of promoting regional cooperation that could facilitate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for future generations in East Asia. In fact, there have been studies to find a way to create an East Asian community, but most of them have focused on military or economic cooperation and failed to achieve the desired result mainly because of the intense competition among the states for military and economic interests. This research focuses on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culture, rather than military and economy, which could avoid acute tension and facilitate mutual understanding among states in East Asia.

To do so, this research elaborates a conceptual framework to promote an East Asian Cultural Cooperation, taking an eclectic approach. Rather than insisting a single theory of regional cooperation, this research combines the material and institutional efficiency factors stressed by neo-realists and neo-liberals with constructivist insights into the importance of norms and identities.

Through this eclectic approach, this research tries to elaborate visions of an East Asian community and strategies to realize them. This research suggests three visions of an East Asian community: ① East Asian Cultural Renaissance contributing to world human culture; ② Foundation of future security cooperation and mutual confidence-building; ③ Prosperity of cultural industry vitalizing regional economies.

This research provides several strategies to realize the proposed visions of an East Asian community. Firstly, it asserted that a regional project should be worked jointly by governments and civic groups. East Asian Cultural Cooperation Committee, East Asian Cultural Foundation, East Asian College and East Asian Foundation for Youth Exchange are proposed as governmental-civic joint cooperative programs. Secondly,

building an East Asian community should be a long-term, gradual process. In this sense, this research suggests four steps towards an East Asian community: ①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for East Asian cultural cooperation; ② The cascade of East Asian cultural cooperation and the enhancement of East Asian identity; ③ the creation of an East Asian community.

Four policy principles towards creating an East Asian community are provided in this research. Firstly, we should reject short-termism and develop sustainable cultural cooperation. Secondly, political and national extremism should be discouraged. Thirdly, we should respect cultural diversities and encourage their creative fusion. Lastly, the past and tradition should not be denied but creatively reconsidered and modernly reinterpreted.

정책 제안

1. 동아시아 역내 문화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안보여건, 각국의 서로에 대한 인식, 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2. 동아시아의 역사와 역내 만연된 민족주의 정서 등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관건은 지역 공동체의 형성에 필요한 문화교류와 협력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

3. 동아시아 문화협력은 단기간에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장기적 사업으로,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인프라 구축' → '문화협력의 확산 및 공동체 의식의 고양' → '문화 공동체의 창설'의 단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동아시아 문화협력체'를 형성하여 역내 문화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효과적인 동아시아 문화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되 민간 부문에서의 호응과 협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6. 동아시아 문화협력은 이미 상당한 교류가 진행 중인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점차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7.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비전은 △문예부흥을 통한 세계 인류문화에 기여 △미래 안보협력을 위한 문화적 신뢰구축의 초석 △문화산업의 융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 제공으로 설정한다.

8.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3대 원칙은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을 통한 창의적 문화의 지향 △문화적 우월주의 지양 및 평등주의적 문화협력 지향 △문화의 상호풍요화를 통한 호혜적 문화소통 지향으로 설정한다.

9.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공식채널로 '한·중·일 3국정상회의 사무국'을 활용하는 한편, 상설기구로서 '동아시아 문화협력위원회'를 신설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동아시아 문화협력 사업의 아이디어 제시 및 민간 실행기관으로 '동아시아 문화재단', '동아시아 대학', '청소년 교류재단' 등을 설립하도록 한다.

11. 동아시아 문화협력 프로젝트는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조명하며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를 함께 아우르는 시도가 되어야 한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과거와 현재가 소통함으로써 창조적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 4

제3절 연구방법과 내용 ····· 7

제2장 이론적 배경 ····· 11

제1절 주요 용어 및 개념정리 ····· 13

1. 동아시아의 개념 ····· 13
2. 문화의 개념 ····· 16
3. 협력체의 개념 ····· 18

제2절 지역 협력에 대한 국제정치이론과 함의 ····· 19

1. 자유주의 이론 ····· 19
2. 현실주의 이론 ····· 21
3. 구성주의적 접근 ····· 23

제3절 동아시아 지역 협력체 형성을 위한 개념적 틀 ····· 25

1. 지역화와 지역주의의 선순환적 상호작용 구조 ····· 27
2. 동아시아 문화협력체 형성을 위한 개념적 틀 ····· 29

제3장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문화협력의 실태 ····· 33

제1절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양상과 의미 ····· 35

제2절 다양한 동아시아 지역 협력 구상과 의미 ····· 39

제3절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실태와 의미 ····· 45

제4장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효과와 추진방향 ····· 51

제1절 동아시아 지역 내 효과적인 문화협력 분야 ····· 53

1. 동아시아 문화협력과 대중문화 ····· 54
2. 동아시아 문화협력과 역사연구 ····· 55
3. 동아시아 문화협력과 관광산업 ····· 57
4. 동아시아 문화협력과 교육협력 ····· 60
5. 기타 문화협력 분야 ····· 62

제2절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효과와 추진 방향 ····· 63

1. 문화내용의 상호풍요화 효과 ····· 65
2. 국경을 넘어 사람 사이의 이해와 공동체적 인식 제고 ····· 66
3. 문화의식의 고취를 통한 자기 정체성의 유지 ····· 66
4. 공동 성찰을 통한 새로운 사고로의 전환 ····· 66

제5장 동아시아 문화협력체 추진방안과 로드맵 ····· 69

제1절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비전과 추진 원칙 ····· 71

1. 비전 ····· 72
2. 추진 원칙 ····· 74

제2절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추진주체와 주요 채널 ····· 75

1.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공식주체로서 '동아시아 문화협력위원회'(가칭) 신설 ····· 76
2.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정부 채널로서 '3국정상회의 사무국'의 활용 ····· 77
3.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민간 주체로서 '동아시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 78
4. 문화협력 심화 및 공동체 의식 고취수단으로 동아시아 대학 설립 및 운영 ····· 79

제3절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추진전략과 체계 ····· 80

1. 동아시아 문화협력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의미 ····· 80

2. 동아시아 문화협력 추진전략과 로드맵 ····· 82

제6장 결론 ····· 85

1. 단기적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문화협력을 창출 ····· 88

2. 지나친 정치적·민족주의적 편향 및 접근방식 지양 ····· 88

3. 이론과 현실이 결합된 문화협력의 추구 ····· 89

4. 문화의 다양성 존중과 창조적 융합 지향 ····· 89

5. 과거와 전통의 부정이 아닌 창조적 성찰과 현대적 재해석 지향 ····· 90

참고문헌 ····· 91

1. 단행본 ····· 91

2. 논문 ·····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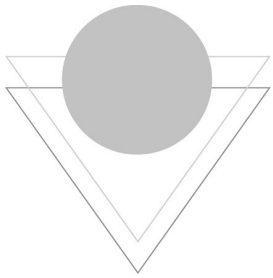
3. 기타자료 ····· 97

표 차례

〈표 1〉 중국과 일본 관광객 입국현황 ····· 58
〈표 2〉 연도별 한·중·일 관광교류표 ····· 59
〈표 3〉 한·중·일 3국정상회의 개최 일지 ····· 78
〈표 4〉 한·중·일 문화협력 관련 자문자 명단 ····· 81
〈표 5〉 동아시아 문화협력 로드맵 ····· 83

그림 차례

[그림 1] 동아시아 문화협력 추진 방향 ····· 65
[그림 2] 동아시아 문화협력체의 비전과 방향 ····· 72
[그림 3]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추진주체와 채널 ····· 76
[그림 4] 동아시아문화협력위원회 조직도 ····· 77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금까지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담은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대부분의 논의는 경제공동체에 집중되어 있다. 아세안(ASEAN)과 유럽연합(EU)도 시작은 경제통합과 그로 인한 역내 경제 발전이 일차적 목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은 아니다. 경제공동체의 궁극적 취지는 당연히 역내 가입국의 경제적 번영이다. 경제공동체는 규범적으로 '통합'과 '협력'을 지향하지만 경제라는 것은 득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영역의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의 갈등을 노정하고 있다. 특히 각 국가들의 경제 발전 정도가 다르고 그로 인해 경제 목표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경제공동체가 노정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공통의 목적과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ASEAN의 경우 ASEAN 사회문화 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찍이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문명의 충돌』에서 문화적 동질성에 바탕을 두었을 때 경제 통합이 더욱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진다고 역설한 바 있다.[1] 김형국·김석근 역시 국민국가들의 지역 협력이나 공동체 구상에 있어 문화적 요소가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동북아 문화공동체 구상은 "경제, 안보 등 다른 분야에서의 지역 협력체제 구축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일종의 장기 프로젝트"라고 규정하였다.[2]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정체성을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은 20세기 초

1) Samuel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chuster, 1997), pp. 125~140.
2) 김형국·김석근, "동북아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건과 전망: 문화적 동질성과 다양성 그리고 정체성,"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3집 1호 (2005), p. 151.

동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면서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며 역내 협력과 공동번영을 주창한 적이 있으나 이는 군국주의 침략명분을 위장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 중국은 유교문화권, 한자문화권 등의 이름으로 오랫동안 동아시아 지역에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을 끼쳐왔지만, 일본의 침략과 사회주의 혁명 등 여러 역사적 격랑을 겪으면서 그 영향력은 퇴색하게 되었다. 한국은 외세의 침입을 끝없이 받아왔고, 특히 북한의 존재로 인해 역내 평화를 누구보다 희구하는 입장에서 동아시아 협력 장치 구상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여 왔지만 아직까지는 논의를 시작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실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협력 노력은 이 지역에 내재된 역사적 갈등과 분쟁 때문에 쉽게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예를 들어, 동북공정, 독도문제, 역사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등의 문제가 여전히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적 공통점을 내세운 공동체 설립의 필요성이 구성원들에게 강한 설득력을 갖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의 '문화협력체' 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후술하겠지만 본 연구에서 '협력체'라는 단어는 '공동체'보다는 다소 느슨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공동체는 지역의 경계와 범위, 가치와 목표,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공유한 행위자들의 집단을 뜻하지만, 동아시아에 중첩되어 있는 상호 대립과 갈등을 고려할 때 문화공동체 형성 논의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그보다는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여 협력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문화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양식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작용하는 만큼, 문화를 협력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지역관계를 대립에서 협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영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기존 연구 검토

동아시아 지역은 워낙 역사적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보니 문화의 힘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어 왔다. 문화공동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화 동질성을 근거로 한 것들이 많았는데 1990년대 초 싱가포르의 리콴유(Lee Kwan Yew) 총리나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Mahathir bin Mohamed) 수상은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라는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동아시아가 서구와는 구별되는 특수한 사회문화적 요소를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시아적 가치는 결국 동아시아 발전의 원동력을 문화적 가치, 구체적으로는 유교의 가치에서 찾음으로써 유교자본주의 담론의 유행을 낳았다.[3)]

3) 함재봉, 『유교자본주의 민주주의』 (서울: 전통과 현대, 2000).

김형국·김석근은 한자문화권으로 대변되는 '공통 문자권'의 관성, 3대 동양사상인 유교, 불교, 도교라는 공통된 문화기반 등이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 공동체를 결성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4] 김광억·전영평도 동북아는 "유교, 불교, 도교 등의 영향으로 가치관과 가족관계, 생활습관 등이 매우 유사"하며 "타 지역에 비해 매우 견고한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5] 다만 근세 들어 일본 제국주의, 냉전, 한반도 분단 등으로 문화적 동질성이 긍정적 방향으로 발현되지 못했을 뿐,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함으로써 문화공동체 설립을 통해 동북아가 상호번영하는 길을 찾는 것이 시대의 과제라고 규정하였다.

동북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시대 구상을 주요 국정목표로 선정하면서부터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사회발전'을 3대 국정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동북아 시대 구상은 대부분 경제협력이나 정치(안보)협력에 대한 것으로, 지역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한국 경제의 외연을 동북아로 확장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의 평화정착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었다.[6]

동북아 경제공동체 및 안보공동체 구상이 기대했던 만큼 진전되지 않자 일부 인문학자들은 '동북아 문화공동체론' 또는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론'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7]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론이나 동북아 안보협력론은 이 지역의 역사적 맥락이나 문화인류학적 이해가 없이 희망사항에 기초한 제안들이기 때문에 현실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즉 동아시아 지역협력은 경제적으로 강대한 지역을 결성할 필요를 주장하기보다는, 조화와 중용을 중시하는 유교문화적 소통과 중재의 역할을 강조하는 문화인류학적 접근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론'은 동아시아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문화인류학적 소통과 공동체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문화인류학적 접근은 국제경제 및 국제정치적 접근에 대한 반발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주장은 20세기 초 서구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에 대한 대응으로 일찌감치 제기된 적이 있다. 중국의 쑨원(孫文)은 1924년 12월 일본의 고베에 있는 현립 고등여학교에서 '대아시아주의'라는 제목의 연설을 하였다. 이 연설에서 그는 아시아의 문화는 가장 오래되고 우월한 문화이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

---

4) 김형국·김석근, "동북아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건과 전망: 문화적 동질성과 다양성 그리고 정체성," pp. 137~157.

5) 김광억·전영평, 『동북아 문화 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 (I)』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44.

6) 이일영 엮음, 『동북아시대의 한국경제 발전전략』 (경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3); 박사명, "동아시아 공동체의 의의와 과제,"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서울: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2008); 배긍찬,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전개 과정: ASEAN+3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서울: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2008).

7) 최송화·권영설 엮음, 『21세기 동북아 문화 공동체의 구상』 (서울: 법문사, 2004); 이광규, 『동북아 문화 공동체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유럽에 대항해야 한다는 식의 '대아시아주의'를 주창하였으며 유럽식 패도의 정치보다 공존공영을 강조하는 유교적 왕도정치를 따를 것을 일본에게 제안하였다.[8]

반면 일본의 경우 명치유신 초기에 일부 사상가들이 '동아연맹운동'을 주도하면서 일본, 한국, 만주, 중국 등이 융화되는 대동아주의를 주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동아시아 담론은 1930년대를 기점으로 일본 군국주의가 부상하면서 다루이 도기치(樽井藤吉)의 '대동합방론',[9] 이시하라 칸지(石原莞爾)의 '동아연맹론' 등을 거쳐 만주와 중국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한 '대동아공영권으로 변질되었다.

일제 강점기 시기의 한국에서도 신규식 같은 이들이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한 아시아주의를 주장하였다.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도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기술하면서 동양의 평화는 한국, 중국, 일본이 대등하게 평화를 유지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것을 파괴하려는 시도는 곧 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하였다. 대체로 한국의 사상가들은 박은식이나 신채호를 포함하여 한국의 독립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적 차원에서 동아시아주의를 표방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시작으로 최근 동아시아 문화협력을 제안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 혹자는 역사교과서 개선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 방안의 차원에서 접근하며,[10] 또 어떤 학자들은 한류문화의 확산을 이용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방안을 제시하였다.[11] 이외에도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률적 접근방안,[12] 관광교류와 협력을 통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방안[13] 등 매우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제안들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중 하나는 이 많은 아이디어들이 동아시아 각국의 입장이나 여건을 반영하기보다는 한국의 입장과 이해관계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다른 역내 국가들의 호응을 얻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한국에서 나온 문화협력의 아이디어 다수가 정책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안된

8) "대아시아주의," 『大阪每日新聞』, 1924.12.3.~12.6, 〈http://www.asiaticresearch.org/front/board/view.do?board_seq=2429757&board_master_seq=2427907〉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검색일: 2018.10.2.).
9) "대동합방론," 〈http://www.asiaticresearch.org/front/board/view.do?board_seq=2429769&board_master_seq=2427907〉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검색일: 2018.10.2.).
10) 류재택, "역사 교과서 개선을 통한 동북아 국가 상호 이해 증진방안 연구," 『21세기 동북아 문화 공동체의 구상』 (서울: 법문사, 2004).
11) 김상배, "한류의 매력과 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 『세계정치』, 제28권 1호 (2007); 진행남, "신한류와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JPI 정책포럼』, 제75권 (2011).
12) 전재경 외, 『동북아 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5).
13) 박기홍, "동북아 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광교류 협력방안," 『21세기 동북아 문화 공동체의 구상』 (서울: 법문사, 2004).

것이 아니라 주로 학자들의 희망사항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어려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지나치게 학술적·이론적 논의에 치중하기보다는 동아시아 각국 전문가들과 정책실무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제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특히 문화협력체 추진 방안을 정치학과 인문학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다수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지만, 국제협력이 발생하는 (또는 발생하지 못하는) 이유를 오로지 국가 간 힘의 논리나 국익의 수지타산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협력의 콘텐츠에 따라 협력의 양상이 어떻게 변동하는 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많은 인문학자들이 동북아·동아시아 문화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지만, 역으로 이들은 문화적 콘텐츠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가 간 복잡한 정치동학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정치학적 접근과 인문학적 접근을 결합하여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제 3 절 연구방법과 내용

본 연구는 다양한 자료와 문헌에 대한 질적 분석이 주된 부분을 차지한다. 정치학, 역사학, 문화학 등 광범위한 학제의 이론을 참고하는 한편 TV나 잡지 등 다양한 매체에 등장하는 문화현상에 대한 콘텐츠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또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내 학자, 외교관, 정부관료 등 관련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중국과 일본으로의 현지조사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협력체 구성에 대한 상대 국가의 생각과 의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다양한 관련 자료 및 통계치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서론(1장)과 결론(6장)을 제외한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동아시아', '문화', '협력체' 등 본 연구가 사용하는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국가 간 문화협력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동아시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역'은 지리적 근접성에 의거해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라기보다 국가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아시아'는 단지 지리적으로 아시아 동쪽에 위치한 모든 국가의 집합을 총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국가들이 '동아시아'의 개념을 두고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경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개념을 한·중·일 3국과 북한, 몽골, 극동 러시아를 아우르는 범위로 설정하였다.

'문화'의 개념은 문학이나 예술작품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을 넘어, 가치, 신념, 규범 등과 같은 인간의 정신적 산물과 인간의 삶의 방식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문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는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지역 협의체라는 범국가적 프로젝트의 근거를 전통문화나 순수예술과 같은 협의의 문화에 두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를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룩한 지식과 역사, 신념, 기술, 예술, 윤리, 도덕, 법률, 관습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총체로 규정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협력체'는 공동의 정체성을 완벽히 공유하는 공동체 이전의 단계로서, 다수의 국가가 상호 이익의 기대 속에 협력하는 조직체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아울러, 자유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의 시각에서 지역 협력을 설명하고, 이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적 틀을 토대로 동아시아 문화협력체 형성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지역 협력의 출발점으로써 현실주의 이론이 강조하는 국가의 선도적 역할과 합의기구의 중요성에 주목하였으며,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효율적인 제도의 확립 차원에서 유망 분야의 협력을 먼저 활성화해 나가는 전략을 모색하였다. 또한 구성주의가 강조하는 지역정체성의 문제 역시 공동체적 인식 형성에 문화가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여건과 현실을 고려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의 비전과 방향, 원칙 등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3장에서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천과 지역 협력의 역사를 되짚고 문화협력의 실태를 조명한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질서는 초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었으며 냉전 시기에는 미·소 대결구도가, 냉전 종식 이후에는 미·중 대결구도가 동아시아 질서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갈등 상황은 앞으로도 쉽게 극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 '환황해권 구상' 등과 같은 경제협력이나 '동북아 안보협력회의'와 같은 안보협력이 간헐적으로 시도된 바 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지역 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협력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의 문화협력 실태를 살펴보면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국 정상회의는 물론, 문화장관회의, 문화콘텐츠 산업포럼, 청소년교육관광포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3국이 문화협력을 증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북한, 몽골, 극동 러시아 등 여타 북방국가들과의 교류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북-일, 러-일 관계는 외교적·정치적 문제로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며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온 몽골과 중국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경색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문화협력체는 이미 교류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한·중·일 3국이 주도하되 점차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4장에서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유망 분야를 탐색한다. 먼저 대중문화는 한류의 영향력으로 이미 민간 분야에서 문화교류가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중문화를 매개로 한 문화협력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파급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문화협력체 추진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역사연구 교류로는 민간 차원에서 공동 역사 교재들이 일부 편찬된 바 있다. 역사는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많은 문화교류 영역이지만, 한때 적국이었던 독일과 프랑스도 공동 역사교과서 편찬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을 볼 때 동아시아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역사연구 교류는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영토문제나 민족문제보다는, 일반 민중의 삶에 초점을 둔 생활사 연구나 인물 연구를 시작점으로 삼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이외에도 4장에서는 '동아시아 방문캠페인', '동아시아 대학' 등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관광협력과 교육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5장에서는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로드맵을 제시한다. 동아시아 문화협력은 어느 한 국가의 문화가 중심이 되는 문화우월주의를 지양하고 국가 간 평등한 문화교류를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제반업무와 사업을 총괄하는 공식 상설기구로서 '동아시아 문화협력위원회' 신설 △동아시아 문화협력을 논의하는 공식채널로서 '한·중·일 3국정상회의' 활용 △문화협력 사업의 아이디어 제시 및 민간 실행기관으로서 '동아시아 문화재단' 운영 △지역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장치로서 '동아시아 대학' 설립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인프라 구축' → '문화협력의 확산 및 공동체 의식의 고양' → '문화공동체의 창설'의 수순을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처음부터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하기보다는 동아시아 문화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각 단계에서 시행되어야 할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2장 이론적 배경

이번 장에서는 동아시아 문화협력체에 대한 본격적 연구에 앞서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와 지역협력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향후 연구의 진행을 위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제 1 절 주요 용어 및 개념정리

동아시아 문화협력체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연구는 주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동아시아', '문화', 그리고 '협력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1. 동아시아의 개념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지역에 대한 정의는 매우 어려울뿐더러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지역이 지리적 근접성에 기초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라기보다는,[14]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한다.[15] 또한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지역의 개념과 경계, 그리고 어느 국가에게 그 지역의

14) Edward D. Mansfield and Helen V. Milner, "The New Wave of Reg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3, no. 3 (1999), p. 590.

15) Andrew Hurrell, "Explaining the Resurgence of 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1, no. 4 (1995), pp. 331~358; Björn Hettne, "Beyond the 'new' regionalism," *New Political Economy,* vol. 10, no. 4 (2004), pp. 543~571; Peter J. Katzenstein, "Introduction: Asian Reg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Network Power: Japan and Asia,* eds. Peter. J. Katzenstein and T. Shiraishi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 7.

멤버십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치적 경쟁을 통해서 결정되고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동아시아의 개념 역시 역사적으로 다양한 세력들 간의 정치적 경쟁을 통해 생성, 발전, 소멸 또는 변화해 왔다. 동아시아라는 개념을 처음, 그리고 가장 자극적으로 주장했던 것은 일본 제국주의였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0년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주창하며 동아시아라는 지역 개념을 제시하였다. 일본이 주장한 대동아공영권은 일본, 한반도·중국·만주 등 동북아시아를 중심축으로 하고 있었으며,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말레이시아·태국·미얀마, 오세아니아의 호주·뉴질랜드, 멀게는 인도까지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이었다.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서양 세력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일본 주도의 지역 질서를 수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의 패망과 함께 대동아공영권의 논의는 급속도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기간 동안 아시아 지역에는 뚜렷한 지역 개념이 형성되지 못했다. 아시아 전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 간의 대립으로 양분되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가 다시 중요한 지역적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냉전이 종식된 직후였다. 1990년 12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Mahathir bin Mohamad) 총리는 유럽과 북미의 지역주의 움직임에 대항하기 위해 '동아시아 경제그룹'(East Asian Economic Group·EAEG)을 제안하였다. 비록 마하티르 총리는 동아시아의 정확한 경계와 회원국의 멤버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추상적이나마 동아시아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고 미국과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의 서구 세력을 제외한 지역의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마하티르가 제시한 동아시아 지역 개념은 아시아의 주류적인 지역 개념으로 발전되지는 못하였다. 냉전 이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APEC)를 주도하며 아시아-태평양 중심의 지역주의를 표방했던 미국은 자국이 배제된 마하티르의 동아시아 지역 구상을 결코 용인할 수 없었다. 미국은 일본 정부가 마하티르의 구상을 지지하지 않도록 압박하였고, 이에 일본은 마하티르의 구상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결국 마하티르의 동아시아 지역 개념은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념과 정치적 경쟁의 과정에서 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1990년 초반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주류적 지역 개념은 아시아-태평양이 되었다.

동아시아 지역의 개념이 전면에 다시 부상한 것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ASEAN+3'의 등장하면서 부터이다. 1997년 1월 일본이 ASEAN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하자 ASEAN 국가들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회의를 역제안함으로써 ASEAN+3가 탄생하였다.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의 정상들은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인 1997년 12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ASEAN+3는 마하티르 총리가 제안한 동아시아 경제그룹(EAEG)의 부활로 인식되었으며, 그 결과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개념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ASEAN+3의 탄생과 함께 주류적인 지역 개념으로 등장한 동아시아는 2000년대 중반 중국과 일본의 지역 주도권 경쟁 속에 다시 한 번 변화를 겪게 된다. 지역 주도권을 두고 경쟁했던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를 규정하는 지역의 경계와 회원국의 멤버십을 두고 서로 대립하였다. ASEAN+3는 '+3'라는 명칭에서도 나타나듯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기구보다는 ASEAN의 부속적 기구의 성격을 갖는 불완전한 지역기구였다. 따라서 ASEAN+3의 정상들은 ASEAN+3를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정상 회의'(East Asia Summit·EAS)로 전환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던 중국은 ASEAN+3를 조속히 동아시아 정상 회의(EAS)로 전환하여 자신의 주도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반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점차 커져가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했던 일본은 원래 합의했던 동남아 10개국과 한·중·일 3국으로 구성된 EAS가 아닌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하는 새로운 EAS를 제안하였다.

한국에서도 학자들 간에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개념에 대해 상반된 논쟁이 있어 왔다. 일부 학자들은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개념이 상호 대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일부 학자들은 양자의 개념이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전자의 관점은 과거의 중국 중심적인 동북아의 개념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려는 것이고, 후자의 관점은 동아시아를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보려는 시각이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의 개념은 지역의 경계와 범위 설정에 있어 관련국들의 입장과 학자들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다만 본 연구는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 개념이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관점에 의거해 동아시아의 개념적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정치적으로 동아시아 개념은 기존의 협의적 동북아 개념을 넘어 남북한과 중국 및 일본을 위주로 한 대륙아시아를 강조하고, 나아가 몽골과 극동 러시아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된다.[16]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개념을 한중일 3국과 북한, 몽골, 극동 러시아까지 아우르는 범위로 설정하려고 한다.[17] 이는 지역 협력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북방 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몽골, 극동 러시아도 동아시아 지역의 범위에 전략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18] 또한 동아시아 개념을 일본이 제시한 개념보다 다소 축소시

16) 이수훈, "동북아시대론," 한국동북아지식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서울: 동아일보사, 2004), pp. 71~72.
17) 김광억·전영평, 『동북아 문화 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 p. 47.

킨 이유는 동아시아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중국과 한국의 입장보다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던 일본의 입장에 편향되어 지역패권주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남아 지역은 이미 ASEAN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지역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를 아우르는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 협력 구상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2. 문화의 개념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듯이 문화의 개념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 실제로 크뢰버(Alfred L. Kroeber)와 클럭혼(Clyde Kluckhohn)은 문화에 대한 175개의 상이한 정의를 소개하기도 하였다.[19] 이처럼 다양한 문화의 정의가 나오게 된 배경은 문화가 원래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 연구자들이 편의에 따라 문화의 정의를 자신이 연구목적에 부합하게끔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다. 사실 문화를 어느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에 대한 개별적, 특수적 정의를 벗어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을 선택하는 것뿐이다.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톰슨과 엘리스, 윌다브스키(Michael Thompson, Richard J. Ellis and Aaron B. Wildavsky)가 제시한 개념이다.[20] 이들은 문화의 개념을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 관점은 정치학적인 것으로, 문화를 가치, 신념, 규범, 상징, 이념 등과 같은 정신적 산물로 간주한다. 다른 하나는 인류학적 관점으로, 문화를 인간 삶의 방식과 태도를 포괄하는 것으로 바라본다. 이들은 두 가지 관점 중 어느 한쪽의 관점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두 가지 관점을 조화시키고자 하였으며, 문화라는 현상이 문화적 편향과 사회적 관계가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이룸으로써 발생한다고 보았다. 결국 문화는 사실상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룩한 지식과 역사, 신념, 기술, 예술, 윤리, 도덕, 법률, 관습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총체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의 영역 역시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삶의 방식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습득, 전승된다. 인간의 문화적 특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18) 대만도 동아시아 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대만을 동아시아 지역으로 포함할 경우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 결과 동아시아 협력의 중요 국가인 중국의 참여와 협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대만을 동아시아 지역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19) Alfred L. Kroeber and Clyde Kluckhohn,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 (New York: Vintage Books, 1952).

20) Michael Thompson, Richard J. Ellis and Aaron B. Wildavsky, *Cultural Theory* (Colorado: Westview Press, 1997).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사회 속에서 생활하며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습득한 문화를 세대 간에 계속해서 전승하고 연결하며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기도 한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문화의 범위 내에서 행동하고 그에 맞는 신념을 갖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지 결정하도록 해준다. 이는 곧 문화가 사회적 행동양식을 규율하는 일종의 규범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는 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공유된 규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정할 수 있다.

문화가 이처럼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습득되고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규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상호 대립적인 인간관계, 적어도 비협력적인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데 문화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상호 대립적인 동아시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있어 문화가 중요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물론 동아시아에서 문화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협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최정운에 따르면 근대 이후 문화에 관한 담론들은 "점잖기는 해도 목에 칼이 들어오는 살벌한" 이야기였다.[21] 동아시아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문화는 민족주의의 정서와 결합하여 심각한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문화의 개념이 18세기말 독일 지식인들에 의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집단들 간의 우열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였기 때문에, 그 자체는 정치가 아니지만 정치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까닭이다. 문화의 정치적 성격은 이후 민족주의와 결합한 근대국가 건설 과정에서 더욱 극대화 되었다. 근대국가 건설의 과정은 기존의 전근대적 질서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을 '국민'으로 편입시켰다. 그리고 국민과 국민이 아닌 자를 나누는 기준으로 문화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근대국가 건설기와 냉전기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에서 문화는 결코 협력의 매개로 작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문화가 가지는 정치적 성격은 냉전이 종식된 1990년대 이후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냉전기에 중시되던 군사력과 경제력을 대신하여 문화를 중시하는 시각이 부상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가 갖는 여러 가지 특징 중 '혼종'의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22] 그 이유는

---

21) 최정운, "문화와 권력," 『세계정치』, 제7권 (2007), pp. 44~67.

22) 김범수는 문화의 특징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먼저 "지배(domination)"는 특정 문화가 다른 문화를 "열등하고(inferior)", "저급하고(low)", "야만적인(barbarian)" 문화로 정의하여 억압하는 것을 말하며 19세기부터 20세기 중반에 걸친 제국주의시기에 나타났다. "충돌(clash)"은 이질적 문화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을 지칭하며 탈냉전 이후 상이한 문명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공존(coexistence)"은 이질적 문화가 서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공진화(co-evolution)"는 이질적 문화가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호작용을 통해 변해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혼종(hybridization)"은 이질적 문화가 섞이고 혼합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국제적 인구 이동의 증가로 다양한 문화들이 섞이고 혼합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많은 학자들이 혼종을 세계화 이후 문화 간 상호작용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간주하게 되었다. 김범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과 세계정치," 『세계정치』, 제18권 (2013), pp. 145~184.

세계화와 국제적 인구이동, 이민의 증가로 문화 간 혼종이 증가하면서 '혼종'이 세계화, 국제이주 등 탈근대사회의 문화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혼종'에 대한 관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문화협력을 통해 '상호풍요화'(inter-fertilization)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한다.[23] 두 나라가 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더 풍요롭게 발전시키게 된다는 '상호풍요화'의 개념은 동아시아 각국이 문화공동체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확고한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문화협력을 통해 서로가 발전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함께 새로운 문화 르네상스를 지향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 협력체의 개념

지역 협력체(regional cooperation)와 지역 공동체(regional community)는 지역 협력의 목표로 자주 거론되는데 협력체와 공동체는 엄밀하게 말한다면 다소 의미가 다르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협력체는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관계에 있는 조직체"를 말한다. 따라서 지역 협력체란 지역 내 있는 행위자들이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관계에 있는 조직체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협력체는 무엇을 위하여 서로 힘을 합하고 돕는 것인가? 다양한 행위자들이 협력을 하는 이유는 협력의 행위를 통해 '공동의'(common), 혹은 '상호적인'(mutual) 이익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협력체는 '지역 내의 행위자들이 공통의 혹은 적어도 상호적인 이익의 달성을 위해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관계에 있는 조직체'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24]

반면 공동체는 협력체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공동체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협력체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공동의 이해관계는 그들이 가진 공통의 가치와 목표, 그리고 유사한 정체성을 통해서 형성된다. 따라서 공동체는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동의 가치와 목표, 공동의 정체성,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의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23) 여기에서 '상호풍요화'(inter-fertilization)라는 개념은 영국의 도자기 수집가 갓프리 곰페르즈(Godfrey Gompertz)가 문화교류와 소통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곰페르즈는 송나라의 도자기와 고려의 청자를 수집하면서 두 나라 간에 문화적 교류와 협력이 서로의 도자기 기술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처럼 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두 나라가 서로의 문화를 모방하면서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상호풍요화'라는 개념을 고안해냈다. 라종일, "공동체 시대," 『세계일보』, 2010.6.14.; Chewon Kim and Godfrey St. G. M. Gompertz, *The Ceramic Art of Korea,* (NY: Yoseloff, 1961), p. 222.

24) 이러한 관점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의 공통의, 혹은 적어도 상호적인 경제적 이익을 달성을 위해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조직체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박용덕은 에너지 협력체를 정의하면서 협력체를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작용하는 제도적 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박용덕,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의 구성 및 운영 메카니즘: 다자간 에너지협력체틀과 WTO체제의 조화성을 중심으로』 (서울: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p. 23.

지역 공동체는 지역의 경계와 범위, 지역의 가치와 목표, 지역의 정체성을 공유한 행위자들의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동아시아 문화협력체 구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동아시아 공동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로 상호 대립하고 경쟁하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공허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고, 해당 분야에서 협력하는 습관을 기름으로써 공동의 정체성, 공동의 지역 가치와 목표, 그리고 공동의 이익을 형성하고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동아시아 현실을 고려할 때 정치나 경제 영역보다는 문화 영역이 보다 많은 협력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문화는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인간 행동의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인간의 행동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대립적인 동아시아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지역 협력에 대한 국제정치이론과 함의

국제관계연구의 많은 부분이 그러하듯이 지역 협력에 대한 연구 역시 대부분은 국제정치의 3대 거대이론인 자유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지역 협력에 대한 3대 이론의 접근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자유주의 이론

현실주의 이론들이 국가를 내부적으로 단일하고, 합리적이며, 국제정치의 유일한 행위자로 인식하고,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 간의 협력이 달성되기 어렵다고 가정하는 것에 비하여, 자유주의 이론들은 국가 내부의 다양한 행위자 간의 역동적 관계에 주목하고, 국제정치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초국가기구나 국제제도 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제협력 가능성을 강조한다.

지역 협력에 대한 연구들은 유럽 통합의 발전과정을 조명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들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신기능주의 이론은 이러한 이론들의 핵심이자 선구적인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25] 신기능주의의 핵심 가정은 지역통합이 확산의 논리(the logic of

25) Andrew Hurrell, "Explaining the Resurgence of 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pp. 331~358.

spill-over)에 의해 스스로 지속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신기능주의의 대표학자인 하스(Ernst B. Haas)는 확산 효과의 학습과정(learning process)을 통해서 하나의 이슈 영역에서 발생한 경제적 통합이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으로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26] 신기능주의에 따르면, 일단 하나의 통합 노력이 시작되면, 국가 내의 다양한 집단들은 국제 혹은 지역 협력 기구들이 경제적 복지를 증대하고 집합적인 경제적 문제들을 관리하는데 있어 유용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들이 더 많은 지역 통합을 요구함에 따라 한 이슈 영역에서의 지역 통합이 다른 영역의 통합으로 파급된다. 그리고 이러한 파급 확산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초국가적 정치 공동체의 탄생과 하나의 국가 상위의 정치적 제도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신기능주의는 지역 협력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시작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물론 신기능주의자들은 높은 수준의 상호의존이 성공적인 지역 협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기능주의는 민족주의가 지역 통합의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고, 이는 결국 신기능주의의 쇠퇴로 이어졌다.[27] 실제로 1967년 드골(Charles De Gaulle)이 이끄는 프랑스가 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에 가입하려는 영국의 시도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건은 신기능주의 확산의 논리가 현실에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허렐(Andrew Hurrell)이 주장하듯이 신기능주의적 설명은 "지나치게 결정론적이고, 기술적이며, 비정치적(apolitical)이어서" 권력정치의 특성과 국가들 사이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보여주고 있다.[28]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신기능주의 창시자인 하스 본인이 1975년 신기능주의가 실패했음을 선언하기도 하였다.[29]

신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은 신자유제도주의에 의해서 수정되었다. 신자유주의제도주의자들은 국제제도가 국가들 사이의 규칙의 준수를 강화하고 '집합 행동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국가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30] 신기능주의자들처럼 신자유제

---

26) Ernst B. Haas, *The Uniting of Europ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8); Ernst B. Haas, *Beyond the Nation-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4).

27) Stanley Hoffmann, "Obstinate or Obsolete? The Fate of the Nation-State and the Case of Western Europe," *Daedalus,* vol. 95, no. 3 (1966), pp. 862~915; Roger D. Hansen, "Regional Integration: Reflections on a Decade of Theoretical Efforts." *World Politics,* vol. 21, no. 2 (1969), pp. 242~271; Helen Wallace, "The Institution of the EU: Experience and Experiments," in *Policy-Making in the European Union,* 3rd edition, Helen Wallace, William Wallace and Mark Pollack(e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28) Andrew Hurrell, "Explaining the Resurgence of 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p. 349.

29) Ernst B. Haas, "The Obsolescence of Regional Integration Theo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Research Series,* no. 25 (1975).

30) 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도주의자들 역시 국가들 사이에 강화되는 복합적 상호의존에 의해 국제제도에 대한 국가들의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가정한다.[31] 신자유제도주의자들의 핵심 가정은 하나의 효과적인 국제제도가 설립된다면 그 제도는 국가들 사이의 국제협력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또 다른 제도의 설립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제도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국제제도가 창출하는 기능적 혜택을 이해하게 되면 보다 협력적인 행동 패턴을 취하도록 촉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기능주의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제도주의자들도 효과적인 제도가 어떻게 먼저 형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신자유제도주의자들은 국가들 사이의 국제협력과 제도화된 협력 프레임이 '상호성의 원칙'(the principles of reciprocity)과 장기적 이익에 대한 기대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32] 현실주의자들은 신자유제도주의자들이 국가들의 권력투쟁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자유제도주의자들은 제도의 긍정적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스트레인지(Susan Strange)가 경고했듯이 국제제도는 종종 패권 혹은 강대국 연합의 지속적 지배를 위한 착취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33] 그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힘에 의해 만들어진 경제적 정치적 제도와 레짐들은 미국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녀의 비판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중요한 점은 국제제도가 종종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관념적으로 강대국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사실이다.

2. 현실주의 이론

현실주의자들은 국가들 사이의 권력투쟁과 무정부 세상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칙적으로 지역 협력은 어쩌면 현실주의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대상일 수도 있다.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들은 상대적 이득과 힘의 배분 문제에 민감하고, 따라서 국가들 사이의 협력은 발생하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기본적 가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자들은 자국의 상대적 이익을 증진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경제적 복지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들이 종종 협력을 취한다고 강조한다.[34] 그들의 시각에 의하면, 국가들이 다자 협력 및 공동체 형성에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Robert O. Keohan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Essay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oulder, Colorado: Westview, 1989).

31)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1977).

32) Robert O. Keohan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Chapter 6 참조.

33) Susan Strange, "Cave! Hic Dragones: A Critique of Regime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6, no. 2 (1982), pp. 479~496.

34) Robert Gilpin, *Global Political Economy: Understanding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p. 357.

동의하게 되는 주요한 동기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거나 지역 내 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들은 국가들이 함께 모여 특정한 공동체 형성에 나서게 되는 동기를 일종의 안보동맹 추구로 이해한다.[35] 예를 들어 초기 유럽의 통합이 발생하게 된 것은 냉전과 함께 소련의 공산주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보적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ASEAN 역시 그 시작은 외부 위협에 대한 대응, 즉 중국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는 안보적 이해관계가 작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국가들의 경제공동체 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APEC의 추진배경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배경에도 다른 경제공동체의 위협에 대한 배타적 경제 동맹 형성의 동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주의적 시각에 따르면 다른 국제정치현상과 마찬가지로 국가들이 상호 협력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공통된 이해관계의 존재가 중요하다.

카(E. H. Carr)와 모겐소(Hans J. Morgenthou)는 국제제도들이 항상 강대국의 힘과 이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했다.[36]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신현실주의자들은 국가 간의 협력 과정과 전망을 이해하기 위해서 힘의 배분상태, 패권, 힘의 지정학 등에 주목하였다. 특히 길핀(Robert Gilpin)과 크라스너(Stephen D. Krasner)는 패권국가가 국제협력과 제도화된 국제협력의 창출을 촉진한다는 패권 안정론을 제시하였다.[37] 그들에 따르면 패권국가는 자국의 이익, 특히 정치 및 안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제협력과 국제제도의 설립을 촉진한다. 이러한 신현실주의적 시각에 따르면 국가들의 국제협력 동기는 패권국에 편승하여 자국의 안보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 공동체를 추구하는데 있다.

반면, 패권국은 외부 세력과의 힘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 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거나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지역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기도 한다. 페데르센(Thomas Pedersen) 역시 지역의 패권국가들이 지역 협력 프레임을 지역적 차원과 지구적 차원 모두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38] 결국

35)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 25.
36) E. H.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New York: Harper & Row, 1964);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4th edition (New York: Knopf, 1967).
37) Robert Gilpin,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New York: Basic Books, 1975); Robert Gilpin,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Robert Gilpin,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Stephen D. Krasner, "State Power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World Politics,* vol. 28, no. 3 (1976), pp. 317~347.
38) Thomas Pedersen, "Co-operative Hegemony: Power, Ideas and Institutions in Regional Integration,"

패권 안정의 개념은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주의의 이론적 설명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국제협력의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주의자들이 제시한 것이다.[39]

패권 안정 이론의 핵심 가정은 두 가지이다. 첫째, 국가들 사이의 국제협력과 제도화된 협력 프레임은 패권국가가 촉진하고 관리할 때 가장 잘 설립되고 발전한다. 둘째, 패권국가의 쇠퇴는 현존하는 국제협력과 제도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 지역 협력에 대한 패권 안정 이론의 함의는 하나 이상의 핵심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지역 통합의 과정을 촉진하는데 기꺼이 사용할 의지가 있는 경우 비로소 지역 협력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40]

지역 협력을 연구하는데 있어 패권 안정 이론은 지역의 권력 배분 상태와 패권국가 혹은 강대국들의 동기와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패권 안정 이론이 가지는 몇 가지 한계 역시 존재한다. 특히 코헤인(Robert O. Keohane)이 지적하였듯이, 패권 안정 이론은 패권국가 혹은 강대국 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강제되는 규칙에 어떤 국가들은 협력하고 어떤 국가들은 도전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41] 지역 국가들이 오로지 패권국가가 제공하는 특혜 혹은 제재 때문에 국제협력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상호성의 원칙(the principles of reciprocity),[42] 이데올로기의 내재화(internalization),[43] 또는 사회화의 과정(socialization process)[44] 때문에 협력에 참여하기도 한다.

3. 구성주의적 접근

최근 구미학계의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구성주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국제관계에서 물리적 힘의 작용보다 관념의 힘의 작용을 강조하며, 전쟁과 대립보다는 협력과 신뢰를 통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창출을 역설한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구성주의자들은 국가의 이익이 고정되어 있으며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이해하는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합리주의적 가정을 비판한다.[45] 구성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8, no. 4 (2002), pp. 677~696.

39) Kjell Hausken and Thomas Plümper, "Hegemonic Decline and International Leadership," *Politics & Society,* vol. 24, no. 3 (1996), pp. 273~295.

40) Robert Gilpin, *Global Political Economy,* p. 356.

41) Robert O. Keohane, *After Hegemony,* p. 39.

42) *Ibid.,* pp. 1~290.

43) Robert Cox,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0, no. 2 (1981), pp. 126~155; Bruce Russett, "The Mysterious Case of Vanishing Hegemony; or, Is Mark Twain Really Dead?,"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9, no. 2 (1985), pp. 207~231.

44) G. John Ikenberry and Charles Kupchan "Socialization and Hegemonic Pow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4, no. 3 (1990), pp. 283~315.

45) Martha Finnemore, *National Interests in International Society* (Ithaca, New York: Cornell

주의자들에 따르면 국가(혹은 행위자)는 집합적 정체성, 규범적 관념이나 믿음과 같은 사회적 구조 속에서 상호작용을 거쳐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들 정체성에 따라 행위자의 이익이 정의된다. 따라서 국제관계의 특성은 물질적 능력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행위자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과 이익을 재구성하고, 결과적으로 국제적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구성주의자들에게 간주관적(inter-subjective) 이해는 이익과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협력과 공동체가 등장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된다.[46]

지역 협력에 대한 구성주의적 설명은 지역 의식(regional awareness)이나 지역 정체성(regional identity)과 같은 관념적 요인이나 지역 협력의 발전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주안점을 둔다. 지역 통합 과정에서 '우리 의식'(a sense of we-ness)의 중요성은 1957년에 이미 도이치(Karl W. Deutsch)에 의해서 강조되었다.[47] 하지만 지역 통합 연구에서 구성주의적 접근이 중심적인 이론으로 부상한 것은 1990년대 신지역주의(the new regionalism)이론의 문헌들이 등장한 이후이다.[48] 구성주의적 설명들은 지역적 결합성(regional cohesion)이 대체로 공유된 지역 정체성에 바탕을 둔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들 사이에 '지역'에 대한 간주관적 이해가 형성되었다면 이후 국가들 사이의 지역 협력의 촉진이 가능하다고 본다.

지역 협력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을 시도한 사람들은 동아시아라는 지역 개념의 등장과 수용, 국가들 사이의 강화된 결속력(bond) 등이 2000년대 ASEAN+3의 성공적 수립과 발전을 이끌었다고 주장한다.[49] 또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지역 공동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구성원들이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가가 지역 공동체의 형성과 지역의 결합성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헴머와 카첸슈타인(Christopher Hemmer and Peter Katzenstein)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University Press, 1996); Peter, J. Katzenstein, eds.,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Alexander Wendt,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 (2000), pp. 391~425; Alexander Wendt,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8, no. 2 (1994), pp. 384~396; Alexander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46) Andrew Hurrell, "Explaining the Resurgence of 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pp. 331~358.

47) Karl W. Deutsch,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Light of Historical Experi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48) Shaun Breslin, "Theorising East Asian Regionalism(s): New Regionalism and Asia's future," in *Advancing East Asian regionalism,* eds. M. G. Curley and N. Thomas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7), pp. 26~51; Christopher Dent, *East Asian Regionalism*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8).

49) Takeshi Terada, "Constructing and 'Ea st Asian' Concept and Growing Regional Identity: from EAEC to ASEAN+3," *Pacific Review,* vol. 16, no. 2 (2003), pp. 251~277.

지역에서 지역주의가 형성되었던 반면 아시아에서는 지역주의가 형성되지 못하였던 점에 주목하면서, 그 차이의 원인을 지역 정체성에서 찾고 있다.[50] 그들은 유럽 국가들 사이에 공유된 정체성은 유럽 지역에서의 지역 통합을 촉진하였던 반면,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공통적인 정체성 부재는 지역 통합 노력의 실패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지역 정체성은 공통의 문화, 역사, 종교적 전통 등의 내부적 요인이나, 외부로부터의 정치적 위협 혹은 문화적 충격 등에 의해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지역 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지역 정체성은 역사 속에 내재되어 있음과 동시에 사람들의 정치적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51]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이며, 지역 정체성 역시 정치적 경쟁을 통해서 형성된다. 따라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이들은 만들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공간적이고 연대기적인 정체성을 상상해내고, 상상된 정체성을 다른 이들에게 확산시키려고 한다.[52] 이들의 이러한 노력이 지역 내외의 정치적 행위자들에게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지역 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해 질 수 있는 것이다

제 3 절 동아시아 지역 협력체 형성을 위한 개념적 틀

이 절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지역 협력에 대한 국제정치 이론들의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화협력체 형성을 위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선 세 가지 이론적 접근은 지역 협력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다만 어느 하나의 이론만으로는 성공적 지역 협력을 담보하는 완전한 함의를 제시할 수 없다. 세 가지 이론들은 각자가 강조하는 요인, 즉 제도적 효율성, 물질적 능력, 지역 정체성을 통해 지역 협력의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 해버리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역 협력은 경제, 정치,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하다. 헴머와 카첸슈타인은 '선택적 접근'(an eclectic approach)을 통해 여러 가지 이론적 맥락을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53] 즉, 특정 주제에 대하여 하나의 이론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론들의 함의를 융합하여 주제에 대한 종합적 설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들은 신현실주의자

50) Christopher Hemmer and Peter J. Katzenstein, "Why is There No NATO in Asia? Collective Identity, Regionalism, and the Origins of Multilater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6, no. 3 (2002), pp. 575~607.
51) Björn Hettne, "Beyond the 'New' Regionalism," p. 565.
52) Iver B. Neumann, "A Region-Building Approach to Northern Europ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0, no. 1 (1994), pp. 53~74.
53) Christopher Hemmer and Peter J. Katzenstein, "Why is There No NATO in Asia?," pp. 575~607.

가 강조하는 국가의 능력, 신자유주의자가 강조하는 제도적 효율성, 구성주의자가 강조하는 규범화가 서로 적절히 혼합되어 종합적인 접근방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피네모어와 시킨크(Martha Finnemore and Kathryn Sikkink) 역시 '전략적 사회 구성주의'(strategic social constructivism)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합리성과 규범성이 반드시 상반되는 것은 아니며 이 둘을 상호 연계하는 선택주의적 시각을 제시하였다.[54] 레이크(David A Lake) 역시 국제정치경제 현상의 설명에 있어서 '전략적 선택론'(strategical choice theory)이라는 종합적 선택방법을 제시한 대표적인 절충주의 학자이다. 레이크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분석력이고 결과이지 분석수준의 문제(levels of analysis)나 이론적 정밀성(theoretical rigorousness)에 집착하여 분석력이 제약되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한다.[55]

모라브식(Andrew Moravcsik)이 제시한 자유주의적 정부간주의(liberal inter-governmentalism) 역시 방법론적 선택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56] 그는 지역 통합의 단계를 국가의 선호 형성, 국가 사이의 협상, 초국가적 제도의 형성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는 국가의 지역 통합 선호 형성을 설명함에 있어 신기능주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점증하는 경제적 상호의존을 관리하기 위한 특정 분야의 압력이 지역 통합 요구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지역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 간 협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실주의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지역 협력 과정의 결과는 국가들의 상대적 협상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통합의 세 번째 단계인 초국가적 제도를 설명하면서 그는 신자유제도주의의 입장을 받아들여 초국가적 제도들이 지역 협력의 촉진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의 논의들은 지역 협력의 과정을 분석함에 있어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제공하며, 동시에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구상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즉 지역 협력은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들 중 어느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만 촉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협력체 촉진방안을 모색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중요한 개념적 틀을 제공해 줄 것이다.

---

54) Martha Finnemore and Kathryn Sikkink, "International Norm Dynamics and Political Cha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2, no. 4 (1998), pp. 887~917.

55) David Lake, "Theory is Dead, Long Live Theory: The End of the Great Debates and the Rise of Eclectic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9, no. 3 (2013), pp. 567~587.

56) Andrew Moravcsik, "Preferences and power in the European Community: A liberal governmentalist approach,"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 31, no. 4 (1993), pp. 473~524; Andrew Moravcsik, *The Choice for Europe: Social Purpose and State Power from Messina and Maastrich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1. 지역화와 지역주의의 선순환적 상호작용 구조

동아시아 문화협력체를 구상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방향은 지역주의와 지역화의 선순환적 구조이다. 지역 협력체의 형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역 협력을 촉진하는 두 가지 방식을 이해하고 이러한 접근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협력체의 형성은 '지역화'(regionalization)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57]

지역화는 민간 영역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역 협력이 촉진, 강화되고 지역 개념과 정체성이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지역화는 국가 차원의 '공식적이고 의도된' 행동을 통해 지역 협력이 촉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하부 단위에서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비공식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지역 협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말한다.[58] 이러한 점에서 지역화는 아래로부터의(bottom-up) 지역 협력이다. 시장의 확대, 국제 이주의 증가,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대 등이 지역화를 촉진하는 주요한 동인들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들은 국가 혹은 국가 하부 단위에서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고, 국가 정체성을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지역 단위의 정체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지역화를 통한 지역 협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일반시민들의 상호 접촉이 증대되는 방식, 다양한 교류가 형성되고 발전되는 방식, 그리고 다층적 사회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해 정치적 정향, 사상적 토대, 사고의 방식 등이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확산되어 최종적으로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역 협력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조명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화는 신기능주의, 구성주의적 지역 협력의 방식과 일맥상통한다.

반면에 지역주의는 "경제적, 정치적 노선에 따라 특정한 지역적 공간을 만들기 위한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로 정의된다.[59] 국가들이 의도된 정책 목표를 가지고 특정 지역 국가들 간의 공식적인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 행위자는 국가이다. 국가가 의도된 목표와 정책을 통해 특정한 지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호 교류를 증대시키고, 지역이 지향하여야 할 공통의 목표를 정하며, 지역 공통의 정체성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주의는 위로부터의(top-down) 지역 협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주의를 통한 지역 협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지역 협력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기 때문에 정부 간 협상 혹은 타협에 주목한다. 지역 협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국가 간의 물질적 힘의 배분 상태와

57) 지역화와 지역주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문인철·이한수·박진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 (서울: 국회사무처, 2013), pp. 13~16 참조.
58) Andrew Hurrell, "Explaining the Resurgence of 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pp. 334~335.
59) Anthony Payne and Andrew Gamble, "Introduc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and World Order," in *Regionalism and World Order,* eds. Andrew Gamble and Anthony Payne (London: Macmillan, 1996), p. 2.

상대적 힘의 크기에 주목하는 현실주의와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국제제도의 형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제도주의 이론들이 지역주의적 접근을 취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시민사회와 이익단체 등 민간 중심의 지역화와 국가 행위자 중심의 지역주의는 지역 협력이 형성 및 발전되는 과정과 주요 행위자가 수행하는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중요한 점은 현실에서 이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만 지역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두 방식이 동시적이고 상호적인 작용을 통해 지역 협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지역화와 지역주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역화와 지역주의 간의 상호작용 중 첫 번째 고려해야할 점은 지역 협력이 어디에서부터 촉발되는가이다. 첫 번째 방식은 지역화가 선행하고 지역주의가 응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틀리(Walter Mattli)는 지역 협력체의 형성 과정을 아래로부터의 수요와 위로부터의 공급으로 이해한다.[60] 신기능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민간 영역의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 행위자들은 역내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는 조치들을 정부에 요구한다. 한편 정치적 집권과 정권의 안정적 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부 행위자들이 이들의 요구에 반응하여 지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마틀리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리더십을 강조한 킨들버거(Charles Kindleberger)의 논의를 수용하면서, 국가들이 민간 영역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여 지역 협력 제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국가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61] 즉 이는 아래로부터의 지역화가 위로부터의 지역주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다. 후술하겠지만 실제 유럽연합의 문화협력 과정에서 독일과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정부에게 공동역사 교과서 편찬을 요구하고 두 나라 정부가 수용한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은 지역주의가 지역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즉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민간 영역의 교류를 증진하고 상호 이해를 확대하는 정책을 실행함에 따라 민간 영역들 간의 경제, 사회적 교류가 시작되는 것이다. 동남아 국가연합의 발전과정이 여기에 부합된다고도 볼 수 있다. 사실 ASEAN의 처음 창립목적은 비 공산권 동남아 국가들이 역외국가의 공산화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구상된 것으로, 지역 국가들 간의 의도적이며 정치적인 목적의 협력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후 안보위협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ASEAN은 정치·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오늘날 대표적인 지역 공동체 중 하나가 되었다.

---

60) Walter Mattli, *The Logic of Regional Integration: Europe and Beyo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61) Charles Kindleberger,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London: Allen Lane, 1973).

지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화와 지역주의의 상호작용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은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협력이 또 다른 형태의 협력을 촉진하는 반복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지속가능한 협력'(sustainable cooperation)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들이 의도적으로 민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지역주의가 우선하였다면, 이러한 정책이 민간 영역의 교류를 확대하고 이는 다시금 국가 사이의 더 큰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끌어내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동아시아 문화협력에 적용시키면, 먼저 정부 차원에서 대표적인 상설협력 기구의 설립과 기금확보가 중요하며 민간 차원에서는 함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문화협력 기구 및 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2. 동아시아 문화협력체 형성을 위한 개념적 틀

동아시아 국가들은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경제적으로 상호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경쟁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들의 상대적 이익에 대한 우려와 힘의 불균등한 배분에 대한 우려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다. 구성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립과 경쟁은 공통된 정체성의 부재,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이익과 대외 행동을 규정하는 사회적 구조에 의한 결과이다. 헴머와 카첸슈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통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62] 오히려 웨버(Douglas Webber)가 주장하는 것처럼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과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해결되지 않은 역사의 기억(과거), 서로 다른 정치 체제로 인한 차이(현재), 그리고 힘의 우위가 뒤 바뀔지 모른다는 두려움(미래)으로 인해 상호 경쟁하는 경쟁적 갈등구조를 형성하고 있다.[63] 이처럼 동아시아 국가들은 역사적 상호작용을 통해 민족주의와 권력정치의 사회적 규범을 형성하였고, 이는 다시 동아시아 국가들의 행동, 즉 경쟁, 대립, 갈등의 행동을 규정하고 있다.

신자유제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제제도는 국가들이 상호 협력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주장한 것처럼 국제제도는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국가들이 상호 불신하고 경쟁하고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제도의 형성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패권 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제제도를 형성하고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국가의 적극적 의지와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 차원에서의 협력의 의지와 의도가 명확하게

62) Christopher Hemmer and Peter J. Katzenstein, "Why is There No NATO in Asia?," pp. 575~607.
63) Douglas Webber, "Two Funerals and a Wedding? The Ups and Downs of Regionalism in East Asia and Asia-Pacific after the Asian crisis," *Pacific Review,* vol. 14, no. 3 (2001), pp. 339~372.

드러나거나 선행되어 민간협력을 선도하고 견인하는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국가들 간의 다자적 협력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패권 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직 패권국가만이 제도의 형성과 협력의 촉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적인 패권 안정론자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작지만 리더십을 가진 국가도 제도의 형성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과 같은 강대국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들도 제도의 형성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수 있다. 특히 문화적 영역의 제도들, 예를 들면 뒤에서 언급하게 될 동아시아 대학이나 동아시아 문화재단 등의 국제제도들은 커다란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관념적 깊이와 아이디어의 참신성 등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문화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한국과 같은 국가들이 문화협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이니셔티브가 한국의 국익실현 차원에서 성급하게 접근하기보다 지역 전체의 공동이익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도국가의 문화협력 이니셔티브를 통해 형성된 지역제도들은 민간 영역에서 동아시아 공동문화와 규범의 형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구성주의 시각에서 피네모어와 시킨크는 국제사회의 규범이 형성(emerging), 확산(cascading), 내재화(internalizing)의 세 가지 단계를 거쳐 발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64]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와 규범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주류적인 문화와 규범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도국가의 문화교류 이니셔티브에 의해서 형성된 동아시아 대학이나 동아시아 문화재단 등은 동아시아 각국의 학자 및 학생들의 공통 연구와 교류,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대안적 동아시아 문화와 규범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형성된 문화와 규범이 지역 내 다양한 민간 행위자들에게 확산되고 수용되어 최종적으로 내재화된다면, 이는 하나의 대안적 문화와 규범이 아닌 주류 문화와 규범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즉 공통의 문화와 규범을 가진 민간 행위자들의 교류 증대는 구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행위자들 사이에 공유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금 지역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지역 협력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민간 영역의 행위자들이 공통의 가치와 목표, 그리고 지역 협력 규범을 형성하게 된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정부에 민족주의와 권력정치의 규범에서 벗어나 협력의 규범과 '우리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게 된다. 정권의 획득 및 유지를 위해 국내 민간 영역의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정부들은 이러한 규범변화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

자국 내 민간 행위자들의 규범 변화 요구를 수용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적 수준, 즉 지역주의

64) Martha Finnemore and Kathryn Sikkink, "International Norm Dynamics and Political Change," pp. 887~917.

수준에서 국제 규범의 변화를 위한 협의에 나서게 되고,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지역주의 수준에서의 합의는 과거 민족주의와 권력정치의 규범 속에서 상호 경쟁, 대립, 갈등하던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게 된다. 새로이 합의된 협력의 규범과 '우리 의식' 속에서 국가들은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다란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동아시아 문화협력체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제협력 이론의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기존의 엄격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잣대에서 접근하기보다 다양한 이론을 종합하여 취사선택하는 '전략적 선택주의' 관점에서 3가지 국제협력 이론의 핵심주장을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구상에 적용한다. 즉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구상에 있어서 현실주의 이론이 강조하는 특정 국가의 선도적 역할,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강조하는 효율적인 제도의 확립, 구성주의 이론이 주장하는 지역 정체성의 형성이 모두 중요하며 이러한 이론적 주장이 상호 배타적이기보다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 본 연구는 먼저 현실주의적 제안을 수용하여 동아시아 문화협력체 구상에 있어서 핵심국가들의 공동합의의 중요성과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선도적 역할에 주목하며,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점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 전략을 모색한다. 처음부터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큰 틀의 공식적 협력을 지향하기 보다는 거래비용의 감소 차원에서 역내 지역 협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한·중·일의 협력을 먼저 활성화하고 다음 단계에서 더 큰 지역으로 확산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여기에 구성주의가 강조하는 지역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체적 인식 형성에 필요하고 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의 비전과 방향, 원칙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 협력이 민간이나 정부주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구조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 지역화와 지역주의 논의를 수용하여 선순환적 협력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즉 지역화의 논의에서 주장하는 민간의 자발적 역할과 지역주의 시각에서 강조하는 국가 차원의 의식적인 행위가 서로 선순환적 구조를 형성하여 지역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공식적인 협력과 민간 차원에서 발생하는 자발적 협력이 어떤 조직들과 프로그램들을 통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역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 유럽의 문화협력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제시된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문화협력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다음 장에서는 현재까지의 동아시아 협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장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문화협력의 실태

제3장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문화협력의 실태

제 1 절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양상과 의미

양차대전 이후 동아시아의 지역관계는 초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인 냉전체제에 의해 지배되는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65]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서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소련이 만들어 놓은 대결구조를 받아들이고 상대진영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2차 대전의 종결과 함께 동유럽에서 확립된 이념 간 대결구조가 동아시아 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며 결국 이는 두 전면전쟁, 즉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으로 이어졌다. 이후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초강대국간의 데탕트와 점차 악화되는 중·소 분쟁으로 인해 역내 국제관계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바뀌었다. 국내경제의 악화와 반전시위에 직면한 미국의 닉슨정부는 소련과 갈등관계에 있던 중국을 회유하여 미국과 소련, 중국이 삼각관계를 이루는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를 모색하였다. 중국은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비동맹권의 맹주를 자처하며 주변에 공산주의 혁명을 수출하고 동남아 국가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었다. 비공산권 동남아국가들은 중국의 공산주의 위협에 놀라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동남아 국가연합의 구성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공산권 동남아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중국은 소련과 결별 이후 개방경제를 표방하면서 친미성향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초반 미국과 소련의 데탕트로 인해 동아시아도 화해무드로 전환되었으며 대결상태에 있던 주변국들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벗어나 우호적인 관계를 모색하였다. 일본과 중국이 먼저 수교를 맺었고 이어서 미국도 중국과 수교를 하게 되었다. 한반도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긴장이

65) 허태회, "21세기 동아시아 지역 협력 구상: 이론적 탐색," 『지역발전연구』, 제1호 (2001), p. 211.

다소 완화되면서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 간의 평화 무드는 오래지 않아 다시 신(新)냉전 상황으로 바뀌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세계적인 데탕트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국과 태국이 지역 협력에 대한 광역적인 협력체 결성을 시도하였다가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 이사회(Asian and Pacific Council·ASPAC)라고 불리는 이 지역 협력기구는 처음에는 지역안보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한국과 태국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회원국 간에 입장 차이를 조율하지 못하여 곧 해체과정을 밟게 되었다.[66] 특히 중국에 대한 회원국 간의 상이한 인식 차이와 공동이익의 부재 등으로 공식적인 지역 협력기구로 발전되지 못했다.[67] 반면 동남아에서는 ASEAN이라는 지역 협력기구가 만들어졌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의 비공산권 5개국으로 시작된 ASEAN은 현재 참가국이 10개국으로 확대되면서 동남아를 대표하는 경제협력기구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 협력기구로 자리매김하였다.

이후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소련이 이 지역에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공산베트남의 인도차이나 패권 장악을 지원하면서, 공산주의 확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동북아에서는 다시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68] 1979년 말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베트남의 캄란만과 북한에 자국의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등 서방측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다. 1980년대 초 소련의 군사적 도발과 팽창이 급격히 진행되자 서방진영 국가들은 다시 강력한 봉쇄정책으로 맞서기 시작하였으며 동아시아 국가들도 이에 적극 동참하였다. 중국과 소련사이에 등거리 외교를 하던 북한은 친미 궤도로 선회한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소련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북·소동맹의 형태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체제가 공고화되면서 이 지역에 신 냉전구도가 확립되었다.[69]

이처럼 신 냉전의 상황으로 들어간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해체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냉전종식이란 전후 40년간 지속된 동서 대결구도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초강대국에 의해 확립된 구조적 틀이 해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냉전이 끝나면서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서방진영의 국가들이 국교를 정상화하고 외교관계를 개선하였으며 중국과 한국, 소련과 한국과 같은 적대국가들 간에도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그러나 냉전의

66) 위의 글, pp. 213~214.
67) Tae-hoi Huh, "The Impact of Economic Dynamism upon International Conflict: A Granger Causality Test for Some East Asian Countri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nver, 1995, pp. 21~22.
68) *Ibid.*, p.22.
69) 허태회, "21세기 동아시아 지역 협력 구상: 이론적 탐색," p. 215.

종식은 한편 냉전으로 인해 억제되어 왔던 진영 내 갈등 요인이 다시 분출하게 되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 이제 역내 국가들은 강대국에 의해 강제되었던 외부적 억제 요인을 벗어던지고 지역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지만 새롭게 불거지는 갈등 요인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에 대한 과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냉전 시기 역내 국제관계가 군사안보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냉전 이후 역내 국제관계는 경제복지 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 경향이 나타났다. 말레이시아가 제안한 동아시아 경제협의체(East Asia Economic Caucus), 태평양 경제협력회의(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아·태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등 다양한 지역 경제협력 구상이 쏟아져 나온 것은 이러한 경향성을 증명한다.

20세기 후반 동아시아 정세는 소련의 붕괴 이후 유일한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한 미국의 패권적 행태에 의해 또다시 영향을 받게 되었다. 탈냉전 이후 심각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 직면한 미국은 강력한 통상정책으로 일본과 아시아 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NICs)들의 경제적 활력을 활용하는 한편 중·일간의 해양영토 분쟁과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하였다. '개입과 확대'(engagement and enlargement)라는 적극적 포용정책을 통해 미국은 패권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고 하였으며 막강한 적이 없어진 상황에서 우방국에게 강경한 통상정책과 일방적인 개입정책을 폄으로써 우방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다. 한반도에서 불거진 1차 북핵위기는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고조를 원치 않았던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저마다의 사정이 맞아떨어지면서 제네바 핵합의라는 방식으로 타결되었다. 개방정책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매달리고 있던 중국이나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는 일본, 경제개혁에 전념하던 러시아 등 주변국들 모두 기본적으로 한반도 긴장완화를 지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정세는 한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와 이에 대한 미국의 대테러전쟁으로 인해 세계는 밤낮 없는 테러와의 싸움에 골머리를 앓았으며 동아시아 역시 그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대테러전쟁의 일환으로 시작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과 이라크 전쟁이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과 첨단무기 사용 덕에 단기간에 끝나면서 일시적으로 미국의 패권이 강화되고 국제질서는 안정을 되찾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후 중동지역과 서방지역에 IS(Islamic State)와 같은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이 등장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대테러전쟁은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의 글로벌 차원에서 전개된 대테러전쟁의 여파는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한반도와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대일 직접협상을 통해 북한과 대화를 했던 민주당 정부와 달리 부시정부는

핵무기와 같은 군사적 모험을 추구하는 북한을 이라크, 리비아와 같은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면서 강압정책으로 일관하였다. 6자회담과 같은 다자 협력 틀을 이용하여 여러 번의 협상이 시도되었지만 미국의 대북강경책과 북한의 강력한 반발, 한국정부의 북한에 대한 불신 등이 맞물려 한반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으며 동아시아 정세도 불안정해졌다.

한편 한반도 비핵화문제 이상으로 최근의 동아시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점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중간의 패권경쟁이다. 1970년대 초 소련과 함께 사회주의 진영을 이끌었던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나서게 한 것은 미국이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어느새 G2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 미국은 견제와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이에 대해 '신형 대국관계'를 요구하면서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미·중의 대립구도가 동아시아 역내의 갈등요인과 연계되면서 지역정세에 심각한 파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중일간 센카쿠분쟁과 이에 대한 미국의 일본지원, 대북제재에 대한 미중의 상이한 접근방식과 해법, 중국과 동남아국가 간의 남사군도분쟁과 미국의 개입 등 지역갈등 요인이 역외 갈등관계와 맞물리는 중첩적인 구도를 만들면서 지역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변화양상은 동아시아 지역 협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를 던져준다. 먼저 세계질서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질서도 초강대국들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냉전시기의 동아시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아 냉전의 대결구도를 벗어나기 힘들었다. 냉전의 종식된 이후에도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의 패권적 행태가 동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의 급부상에 대해 초조함을 느낀 미국이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중국을 잠재적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견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고 일본과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배제한 독자적인 지역안보협력이나 경제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최근 미국 공화당 정부의 일방적인 통상정책과 횡포에 맞서서 한·중·일 3국이 지역 FTA 추진을 서두르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단시일 내에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이다.[70]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안보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쉽게 극복되거나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우리가 사회문화적 협력의 강화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지역 협력 문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리더십 문제이다. 만약 국민들의 지지와 여론에 민감한 각국의 지도자들이 당면한 국내 문제 해결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 근시안적이며 민족주의적인 지역주의를 고수한다면 동아시아의 지역 협력에 대한 전망은 어두울

70) "중·일·한 FTA 추진으로 동아시아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하자," 『인민화보 월간중국』, 2018.7.19., 〈www.chinacorea.com/krsdbd/201807/t20180719_800135808.html〉 (검색일: 2019.1.31.)

수밖에 없다. 국가지도자들이 국가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과거의 역사문제와 영토분쟁 문제를 들추어 민족주의적 정서에 편승하는 방식을 따르려고 한다면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번영은 물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급속히 변모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자국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국발전만을 챙기려는 배타적인 민족주의적 접근방식은 주변 이웃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잘못된 정책이다. 타국의 곤경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상호 발전을 꾀하는 상생의 정치가 필요한 시대이며, 열린 민족주의와 열린 지역주의에 바탕을 둔 공존공영의 비전과 신념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이다. 오랫동안 외세의 침입과 지배를 받았던 동남아는 ASEAN이라는 지역기구를 활성화하여 지역 협력의 강화에 일찍 나섰던 반면에 동북아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지역기구를 결성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동아시아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듯이 날로 팽창하고 있는 역내국가 간의 교역규모와 지역경제의 통합수준을 볼 때 이미 이 지역경제들 사이에는 상당한 수준의 상호 의존이 진행되고 있어 지역 협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이미 근본적으로 시장체제 중심으로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역내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지역 FTA가 논의되는 등 지역경제협력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높다. 최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이고 중상주의적인 대외정책 기조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만 한편 미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태로 말미암아 한·중·일 3국이 동아시아 FTA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지역 협력과 관련하여 또 다른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하겠다. 게다가 최근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비핵화 진전은 지역 협력에 있어 오랫동안 걸림돌로 작용해온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지역 협력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진전으로 보인다.

이제 동아시아도 역내 갈등요인을 억제하고 지역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서 역내국가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협력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도모할 시점이다. 여전히 강대국의 패권적 영향력에 휘둘리는 동아시아의 국제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가까운 미래에 정치, 안보, 경제 영역에서 지역 협력을 가속화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것이 바로 동아시아 각국들이 문화분야의 지역 협력으로 눈을 돌려야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다양한 동아시아 지역 협력 구상과 의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2차 대전 이후 동아시아는 지역 문제의 공동해결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해왔다.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구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런 노력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구상에는 정부 차원, 민간 차원, 반관반민(半官半民)의 1.5 트랙 접근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제안된 대표적인 동아시아 협력모델(Track I)로는 동북아 안보협력체(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CSCNA), ASEAN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ARF) 등이 있으며 경제협력 구상으로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st Asian Free Trade Area·EAFTA)와 '두만강개발계획' 등이 있다.[71] 여기에 반관반민 또는 비정부 차원(Track II)에서 제안된 것으로는 동북아협력대화(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NEACD),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이사회(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CSCAP), 동아시아비전그룹(East Asian Vision Group·EAVG) 등이 있으며 민간 NGO 차원(Track Ⅲ)으로서는 반핵아시아포럼(No Nukes Asia Forum·NNAF), 분쟁예방국제회의(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GPPAC) 동북아위원회 등이 있다.[72]

그러나 이러한 모델들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 협력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확고하게 제도화된 형태로 발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먼저 1990년대 초부터 일본을 중심으로 국제경제학자들이 주도한 동아시아 경제협력 모델들을 살펴보면, 동아시아의 경제적 역동성과 역내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에 주목하여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추진방안을 제일 먼저 제안한 국가는 일본이다. 2차 대전 이후 패전국으로서 미국의 군정기간을 거친 일본은 1990년대 초까지 소위 '수출주도전략'(export-led growth)을 통해 미국 GDP의 2/3에 육박하는 경제 초강대국(economic superpower)으로 성장하였다.

일본은 자국의 기술 및 자본, 한국의 생산기술 및 개발경험, 중국의 노동력 및 자원, 극동 러시아의 자원 등이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본의 통상증대에 기여하는 역내 경제공동체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눈길을 끈 방안은 '동북아 선형 자유무역지대' 구상이다. 이는 동북아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당장 전면적인 통합은 어려우니 느슨한 형태의 국지적 통합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즉 중국의 동북지방과 연해도시, 북한의 나진·선봉, 한국의 동해·포항을 포함하여 일본과 극동러시아를 연결하는 무역자유화 지대를 개발하자는 것이다.[73]

또 다른 지역경제협력방안으로는 UNDP(유엔개발계획) 주도 하에 실제 추진되었던 '두만강개발프로젝트'이다. 이는 중국 연변·훈춘과 북한 나진 그리고 러시아의 포시에트를 소삼각 특구지역으

71) 권오윤·沈定昌, "'협력안보'로서의 동북아 평화협정체제를 만들기 위한 조건들," 『평화연구』, 제15권 1호 (2007), p. 80; 라미경,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과 시민사회: 글로벌거버넌스와 NGO," 『평화연구』, 제15권 1호 (2007), pp. 110~120.
72) 라미경,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과 시민사회: 글로벌거버넌스와 NGO," pp. 110~120.
73) 허태회, "동북아 경제 협력방안과 한국의 선택: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 『정책연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1997).

로 연결하고 중국 연길과 북한 청진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대삼각 특구지역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중국이 이 개발계획에 큰 관심을 보이며 추진할 생각이 있었으나 당시에 개발자금 조달이 문제가 되어 지연되었다. 그 이후에는 북한 핵문제와 같은 군사안보적 문제가 발생하여 이 프로젝트도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였다.

이후 '동북아 선형자유무역지대' 프로젝트가 잘 진척이 되지 않자 일본 연안지방의 지자체들이 중심이 되어 남북한의 동해안 지역과 중국 동북부 및 러시아의 동시베리아를 연결하는 '환동해권' 구상을 제안하였다. 일본의 이러한 자국 중심적인 접근에 중국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중국 연안지역과 남북한의 황해연안을 묶는 '환황해권' 구상으로 대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동북아 경제협력의 구상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을 이용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었지만 동북아 3국 간에는 경제적 상호보완성 못지않게 상호 경쟁성도 내재되어 있음이 간과되었다.[74] 또한 당시 동북아 국가들 중에는 지역 경제협력 움직임을 주도하려는 국가가 없었다. 1970년대 말 등소평의 등장으로 늦게 개혁개방에 나선 중국은 지역 경제협력을 통해 일본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을 이용하려는 의욕은 있었지만 아직 정치·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역내 경제협력추진을 주도하기가 어려웠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이라는 목표 아래 점진적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하던 중국은 남부 연안지역의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가속화되자 이제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동북부지역의 경제협력을 통해 일본과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심을 보였으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일본 또한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패권국인 미국을 배제한 지역 협력 틀의 구성에는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보다는 지자체들이 나서도록 하였으며, 미국과 APEC의 광역적 틀 안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군사·경제적으로 대미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두만강 개발계획에 적극적이었지만 군사안보상황으로 인해 이 개발계획이 지연되자 일본과 함께 APEC과 같은 포괄적 지역 협력체의 추진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이 지역 경제협력체의 추진이 공동이익의 부재로 대부분 담론수준에서 끝이 났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이 중심이 되어 동북아 지역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추진되었던 동아시아 안보협력체 구상도 이와 비슷하다. 당시 논의되었던 지역안보협력체의 구상을 살펴보면 먼저 동북아 안보협력

74) 동아시아 3국은 산업화 초기 일본의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모방하여 제조업 수출에 주력하는 단계에서는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한국과 중국이 철강 및 조선 등 중공업 분야의 수출과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에 주력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위의 글, p. 25.

체(CSCNA)가 있다. 이 동북아 안보협력체를 제안한 배경에는 냉전 시 유럽지역의 안보협력을 위해 창설된 유럽안보협력회의가 성공적인 신뢰구축조치(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Measures·CSBM)를 통해 지역평화에 기여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75] 유럽통합의 초석을 다진 CSCE가 과거 첨예하게 대립된 유럽의 냉전 상황을 극복하고 확실한 지역안보협력체로 발전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식을 동아시아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에는 공통의 안보이익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다자적 협력경험이 부족하였다.[76]

다자안보협력의 구상으로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은 아세안 지역포럼(ASEAN Regional Forum·ARF)을 확대 및 강화하는 방안이었다. 1994년 ASEAN의 주도로 발족된 ARF는 탈냉전 이후 가장 대표적인 동아시아 지역안보협의체로서 주목을 받아 왔다. 당시 ASEAN의 정회원국인 7개국 외에도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한국 등이 대화상대국의 자격으로 참가함으로써 아·태지역 안보현안에 대한 공식적인 다자협의체로서 자리매김을 하였다. ARF의 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신뢰구축 촉진, 예방외교 개발, 지역분쟁에 대한 여러 방안의 강구 등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부 간 활동과 비정부 간 활동을 병행·추진하는 이원적 방식을 채택하였다.[77] 이처럼 ARF에 다수의 강대국들이 참가함으로써 ARF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전망이 높아지면서 ARF를 보다 제도화된 지역 안보기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있어보였으나 이후 ASEAN 외교장관회의체를 유지하는 형태의 정례적인 회합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하였다.[78]

여기에 동북아안보대화(Northeast Asia Security Dialogue)는 동북아지역만의 안보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국이 제안한 구상이다. 동북아 지역의 핵심문제인 한반도 긴장완화, 역내국가들 간의 군비경쟁과 해상영토문제, 북한의 비핵화문제 등에 대해 각국 간의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예방외교와 안보협력을 제고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상은 한국이 나름대로 다른 광역적인 안보협의체와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추진하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한국의 제안에 대해 주변국들이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였으나 공식적인 협의체로 발전하지는 못하였다.[79]

일본은 장차 미·일 안보체제에 변화가 생길 경우 이에 대비한 지역안보기구를 구성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지역안보기구를 활용하여 일본의 과거사문제를 청산하거나 희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치군사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과의 상호 협력을 대외정

75) 이철기,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혁의 필요성과 가능성," 『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2호 (1994), pp. 829~830.
76) 허태회, "동북아 안보협력 구상과 한국의 선택," 『허재일 교수 회갑기념논문』 (1999), p. 11.
77) 위의 글, p. 11.
78) 이혁섭,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21세기적 현실성," 『국제정치논총』, 제36집 3호 (1997), p. 201.
79) 위의 글, p. 201.

책의 초석으로 간주하는 일본으로서는 미국을 배제한 다자안보협력체 추진에는 적극적일 수 없었다.

중국 역시 복잡한 영토문제와 지역 갈등구조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차원에서 신뢰구축을 통한 점진적인 안보협력체 추진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양안관계와 남사군도 및 조어도의 해양영토문제 등 안보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다자안보체제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한국은 탈냉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분쟁관리를 통해 주변 정세를 안정시키며 우호적인 통일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어서 동아시아 안보협력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대미(對美)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지역안보협력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었다.

지금까지 경제 및 안보 차원에서 전개된 동아시아 지역 협력 구상들을 살펴보았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동북아 안보협력체의 구상이 기대했던 만큼 진전이 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냉전 시기와 냉전종식이후에도 여전히 미국이라는 역외 국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지역 협력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과거 냉전시기 동북아지역 관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던 미국은 냉전 이후에도 이 지역에 대해 정치·군사적 균형자(balancer)이자 패권국(hegemon)으로서의 영향력을 지속시키려 하기 때문에 미국을 배제한 독자적인 지역 협력체의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80]

지역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미국을 배제한 경제협력체의 추진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한 한국과 일본은 한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에 적극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독자적인 지역경제협력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최근 경제지역주의에 편승하여 중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를 주도하고 나서자 미국은 '환태평양 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TPP)의 추진으로 맞섰으나 트럼프 정부의 등장으로 맞대결이 불발되었다. 지역안보협력의 구상과 관련하여 미국과 안보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대립구도에 있는 중국과 안보협력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미국을 배제한 지역안보협력에 대해 미국이 달가워할 리 만무하다.[81]

여기에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중·일 간에 대립되는 안보이해관계와 북핵문제와 같은 남북한 대립상황도 지금까지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진전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를테면 조어도와 관련된 중·일의 안보이익충돌과 중국을 겨냥한 미·일 신 안보체제는 양국이 지역 협력을 논의하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기초로 안보상황을 개선하려는 일본과

80) 최대석, "동북아 지역안보협력체 조성에 대한 미국의 입장," 『국제정치논총』, 제36집 2호 (1996), pp. 527~545.
81) 미국의 동북아안보협력에 관한 입장에 대해서는 최대석, 위의 글, pp. 527~545 참조.

중국의 계속되는 상호 견제는 중국이 군사경제적으로 팽창하면 할수록 그리고 일본이 더 친미적으로 나갈수록 양국 간에 지역 협력을 공동 아젠다로 설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핵문제와 함께 지속적인 한반도 긴장 상황 역시 양측 간의 관계개선은 물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다자적 협력을 모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또 하나 동아시아 지역 협력이 활성화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동아시아 각국들이 아직도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냉전 종식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교를 수립하고 외교관계를 개선하며 안보문제보다 경제협력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더구나 당시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세계화가 진행되고 시장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지역주의와 지역 FTA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협력 구상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역내 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지역경제들이 대부분 미국시장과 유럽시장에 치중된 경제 발전으로 인하여 상호 간에 공동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충분한 인센티브가 없었다. 당시 이들 지역경제의 상호의존성을 나타내는 교역탄력성(Trade Elasticity)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이 역외경제에서 무역을 통해 얻는 이득이 역내경제에서 얻는 이득에 비해 훨씬 컸기 때문에 역내 경제협력을 선행할 필요가 없었다.[82] 더구나 제국주의 침탈의 기억을 공유하고 역외 국가를 배제한 채 역내 국가들만의 지역 협력에 주력한 동남아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동북아 국가들 간에는 아직도 과거 역사문제가 뿌리 깊게 남아 있으며 상호 불신이 팽배하여 지역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지역 협력과 관련된 노력들과 구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구상들을 중심으로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지역 협력체의 실현성을 평가한다면 군사안보와 경제영역에서의 지역 협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제도화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사안보 분야에서 한·중·일의 이해관계는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는 너무 달라서 양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 중국의 RCEP 추진과 일본의 TPP 추진에서 보듯이 주요 국가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매우 다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경제나 안보 분야가 아닌 사회문화 분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경제와 안보 차원의 지역 협력보다 사회문화와 같은 영역에서의 점진적이고 기능적인 지역 협력이 더 가능성이 더 크다는 식의 주장은 약간의 논리적 비약이 될 수 있다. 동아시아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한다면 이 분야의 지역 협력 역시 단기간에 활성화되거나 제도화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동아시아 여건과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점진적이고 기능적

82) 허태회, "동아시아의 무역팽창과 국제분쟁: 벡터 자기회귀(VAR)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1호 (1997), pp. 283~293.

인 지역 협력이 경제 및 안보 분야보다 다자협력의 출발점으로 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83]

이론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동아시아 지역 협력체제의 형성은 역내 국가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여건들이 모두 충족되거나 마련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다. 즉 정치·안보적 조건에서는 군사안보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초국가적 공동목표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것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정치지도자들의 지역 협력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조건에서도 기본적으로 경제공동체라는 제도적 통합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실현이 가능하다는 실리적 동기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경제통합이나 경제공동체의 추진은 지속가능한 협력(Sustainable Cooperation)의 관점에서 볼 때 실현성이 낮은 것이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조건에서는 지역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공동체 의식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각국들이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문화적 이해와 동질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문화적 소통과 교류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이 일종의 문화적 신뢰구축 조치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문화적 신뢰구축의 장치로써 동아시아 문화협력체의 창설이 중요한 것이다.[84]

제 3 절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실태와 의미

탈냉전기의 도래로 인해 국가 간 상호의존이 심화되면서 국제정치에서 문화는 '지정학적 행위'나 '경제적, 합리적 정신' 등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문화는 국가 간 이해와 화합을 늘리고 평화를 증진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외교적으로 불화와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85] 먼저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배경을 살펴보면, 일찍이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김대중 정부는 1998년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착수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5월 13일 '한일문화교류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21세기가 문화산업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후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정부로부터 과거사에 대한 공식사과를 받고 일본문화 개방을 구체화시켰다. 이와 함께, 1999년 4월부터는 일본과 한국의 청년들이 쌍방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일 워킹홀리데이가 실시되었다.[86]

---

83) 국제제도의 형성과정에서 문화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설명을 예로 들면 문화적 협력은 규범의 형성→ 규범의 확산→ 규범의 내재화의 과정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Martha Finnemore and Kathryn Sikkink, "International Norm Dynamics and Political Change," pp. 887~917 참조.

84) 윤황, "동북아 평화협력체제의 형성조건에 관한 연구: 한·중·일 3국의 기본입장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7권 3호 (2006), pp. 19~30.

85) 라종일, "신질서와 문화-예비적 고찰," 안택원 편, 『21세기 국제정치이론의 새로운 사고』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일본문화 개방에 대한 한국 내 저항이 있기도 하였지만 이후 일본문화는 이러한 우려와 달리 만화나 애니메이션 시장을 제외하고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가운데 한국 드라마인 〈겨울연가〉가 2004년 4월부터 일본 NHK 종합채널에서 방영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을 시작으로 한류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이후 대중가요와 드라마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의 일본시장 진출이 본격화된 것은 물론 한류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다.[87]

한편 남한과 북한과의 문화협력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편이었다. 2007년에 한국방송공사가 기획하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제작을 맡아 24부작으로 편성된 드라마 〈사육신〉은 제작기간 총 2년에 제작비 20여억 원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북한배우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억양과 말투를 사용하였고 극 전개가 더딘 점 등이 남한 시청자들의 취향과 맞지 않아 2~3%대의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하였다.[88] 그나마 학계의 교류협력은 남북 학자들의 유일한 교류 통로인 '국제고려학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되어왔다. 특히 2015년 이후 중단된 '우리말 겨레 큰 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이나 '개성만월대남북공동발굴조사' 등은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들이다.

몽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몽골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의사 이태준 관련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몽골의 마지막 칸인 복드 칸의 어의(御醫)로 활동하면서 몽골 민중들의 건강 역시 책임졌던 이태준은 1919년 몽골 최고훈장인 '에르데니인 오치르'를 받기도 하였다. 특히, 의열단에 가입하여 상해 임시정부에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던 이태준은 몽골을 지배하게 된 백계 러시아인 군벌 운게른 슈테른베르크(Roman Nickolai Maximilian von Ungern-Sternberg)에 의해 살해당하였으나 근현대 한국과 몽골 관계 수립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89] 이에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이 수여되었으며 2001년에는 그의 모교인 연세대학교 총동문회와 연세대 의료원과 몽골정부의 후원으로 기념공원과 기념비가 세워지기도 하였다. 특히 이는 몽골에서의 한류 진흥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90]

그러나 사실상 동아시아 북방국가들과 한국과의 문화교류는 활발하지 못하며 일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실 북한, 몽골, 극동러시아 등 동아시아 북방지역과의 문화교류는 다른 지역과의 교류와 비교할 때 미미한 실정이다. 일본과 극동러시아의 관계는 아직도 북방열도 반환문제로

86)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www.kr.emb-japan.go.jp/visa/visa_working.html〉 (검색일: 2019.1.31.).
87) 中根隆行, *"朝鮮"表象の文化誌—近代日本と他者をめぐる知の植民地化* (東京: 新曜社, 2004).
88) "세계로 부는 한류열풍: 남북합작 드라마 사육신 종영," 『자유아시아방송』, 2007.11.7, 〈www.rfa.org/korean/weekly_program/korean_wave/sk_drama_finish-20071107.html〉 (검색일: 2019.1.31.).
89) 여운형, 『(몽양)여운형 독립운동: 여운형 집필집』 (서울: Bookk, 2018), p. 112.
90) "'몽골의 슈바이처'이태준 선생 만나다," 『YTN』, 2015.7.17, 〈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700613〉 (검색일: 2019.1.31.).

국교를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진전이 없는 상황이며 북한과 일본과의 관계 역시 그동안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한의 군사모험주의로 인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북한과 러시아 모두 미국의 제재대상(세컨더리 보이콧)이어서 친미성향의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한반도 화해분위기로 남북관계가 약간의 진전을 보이고 있을 뿐 북-일, 일-러 관계는 여전히 교착상태에 있어 지역 협력이 미미한 실정이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갈등관계를 겪어온 몽골과 중국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역사문제와 관련하여 몽골이 중국에게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협력의 진전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반면 한·중·일 3국 간의 문화교류는 활발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한·중·일 간에도 역사문제나 영토문제와 같은 제약요인들이 있지만 한·중·일 3국은 상호 무역량의 증대와 함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도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어 문화협력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2006년 한·중·일 관광회담이 관광 교류 협력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한·일, 중·일 한·중 관광 진흥협의회를 통하여 역내 관광교류 활성화도 추진되고 있다.[91] 2007년 개최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한·중·일 문화셔틀 사업이 합의되어 문화 및 예술 분야에서의 공동 공연과 사업들을 진행해오고 있다.[92] 문화교류를 통해 한·중·일 간의 정치적 갈등을 넘어 협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의 문화셔틀 사업은 2007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중·일 영화 특별전(영화 삼국지)' 행사를 개최하여 한·중·일 3국이 협력 제작한 영화 4편을 상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1차 사업이 시작되었다.[93]

2008년에는 제2차 사업으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장황전'을 개최하여 한·중·일의 장황관련 유물 150여점을 선보였다. 2009년에는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 축제인 '한·중·일 유스 페스티벌'을 제3차 사업으로 개최하였다. 그러나 그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한국 정부는 2008년도부터 지속가능한 공동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방안, 협력체계를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94] 그리고, 2009년 10월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간 상설 사무국 설립 필요성에 대한 정상 간 공감대가 확인되었다. 이에 2010년 관련 각서가 서명되었고 2011년 한국 서울에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이 설립되었다.

---

91) 이강욱·이효선, 『한·중·일 국제관광협력 방안연구』 (서울: 한국관광문화연구원, 2008).
92)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신시대 한일 협력 7대 핵심과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3).
93) 한·중·일 3국 문화셔틀 사업은 2007년 제1차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제7차 사업(2015년)이 진행되었다. 제1차~제7차 문화셔틀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홈페이지 참조, 〈kr.tcs-asia.org/?doc_id=tc_board&bo_table=culture&wr_2=board〉 (검색일: 2019.1.31.).
94) 이강욱·이효선, 『한·중·일 국제관광협력 방안연구』, pp. 26~27.

이러한 기조 하에 2010년 9월 5일에 '2010 한·중·일 문화정기교류 콘서트-앙상블 디토 리사이틀'이 개최되어 제4차 문화셔틀 사업이 이어졌다. 5차와 6차 사업은 서울과 상하이에서 2011년 7월 30일부터 8월 27일까지, 그리고 2012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에 개최되었다. 5~6차 사업의 전시회는 한·중·일 3국의 예술인 14명의 작품을 통해 동아시아 미술의 고유한 가치 보존과 재발견의 의의를 강조하고 세 나라의 문화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제7차 사업은 2015년 3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미묘한 삼각관계' 전시회를 통해 개최되었다.

한편, 민간교류사업의 경우 학술적 교류와 민간교류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먼저 학술적 교류의 경우 정부 주도사업과의 연계사업이나 포럼 및 세미나 의 형태를 들 수 있다. 민간교류의 경우에는 시·도별 국제교류 센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류 행사와 사업체들 간의 공동프로모션, 행사 및 프로젝트, 자매도시 간의 민간교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95] 2013년 12월 24일 작성된 제2기 한일신시대공동연구프로젝트 보고서에서는 한·중·일 3국 교육단체와 관련 업체들이 크루즈 선을 이용해 해양 항행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는 동아시아 청소년이 주변국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만들어 지역의 미래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2015년 11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역사문제로 인해 중단되었던 3국 정상회의를 정상화하고 20여 개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하여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3국 협력 기금(The Trilateral Cooperation Fund·TCF)을 조성하기로 했다.[96] 2018년 5월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TCF의 출범이 3국 협력사업의 발전에 유익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3국 외교부 간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20년 도쿄 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 문화 및 스포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3국 문화협력과 관련하여 3국 간 관광교류 확대를 위해 'Visit East Asia Campaign'을 함께 추진하고 '동아시아 문화 도시 프로그램'과 '미래지도자포럼', '3국 문화셔틀'과 같은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97] 2018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하여 '동양평화론'을 제창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북한과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남북 문화협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동아시아 북방국가들과 한·중·일 3국과의 문화교류는 활발하지

95) 이강욱·이효선, 『한·중·일 국제관광협력 방안연구』, p. 29.
96) "韓中日 정상회의, 공동선언 채택…회의 정례화·협력기금 조성," 『헤럴드 경제』, 2015.11.1, 〈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1101000317&md=20151102003122_BL〉 (검색일: 2019.1.31.).
97)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서," 『뉴시스』, 2018.5.10, 〈www.newsis.com/view/?id=NISX20180510_0000304244&cID=10301&pID=10300〉 (검색일: 2019.1.31.).

못한 반면 한·중·일 3국 간의 문화교류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한·중·일은 정상회의나 장관회의를 통해 관광교류를 활성화하고 각종 공연 및 전시를 계획하는 등 문화적 교류를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동아시아의 여타 국가들과 비교해 이들 3국의 교류는 활발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 내 유망한 문화협력 분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현재 활발하게 문화협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중·일 3국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되, 그 시사점을 북방국가와의 협력 방안에 적용하고자 한다.

제4장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효과와 추진방향

제4장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효과와 추진방향

제 1 절 동아시아 지역 내 효과적인 문화협력 분야

동아시아 문화협력이 경제나 안보 분야의 협력보다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역내 국가들이 문화협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을 덜 느낄 뿐 아니라 문화협력을 통해 문화 수준과 문화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 한·중·일 3국은 이 분야에서 이미 상당한 교류와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발전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도 창출하고 있다. 주일 한국대사관의 홍보자료에 따르면 일본 6대 신문에 게재된 〈겨울연가〉의 광고효과는 약 899억 5,203만원으로 추산되며 〈겨울연가〉와 배용준의 경제적 효과는 각각 2,297억 엔과 3,000억 엔(3조 원)으로 계산하였다.[98] 이러한 한류의 영향으로 콘텐츠 산업의 수출액 역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 간 연평균 6.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수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게임 산업이 32억 7,735만 달러로 가장 컸으며, 캐릭터(6억 1,284만 달러), 지식정보(5억 6,641만 달러), 음악(4억 4,257만 달러), 방송(4억 1,121만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99]

2016년도 국내 콘텐츠산업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6.1% 증가한 60억 806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전 산업 수출액이 전년 대비 5.9% 감소한 것과 비교해 주목할 만한 수치이다. 수출액은 영화(49.4%), 방송(28.3%), 음악(16.2%), 광고(16.2%)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내외 경기

98) "일본언론보도를 통해 본 한류붐 - 신문보도(04.1.~12.)에 나타난 욘사마 열풍," 주일한국대사관, 2005.1.17.
99) "'대한민국 콘텐츠' 수출액 첫 60억 달러 돌파," 『정책브리핑』, 2018.6.1., 〈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98&aid=0000248927〉 (검색일: 2019.1.31.).

둔화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국내 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105조 5,10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타 산업에 비해 콘텐츠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100] 2016년도 국내 콘텐츠 산업 종사자 수는 2015년에 비해 약 1.5% 증가한 63만 1,457명으로, 지난 5년 간 약 2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다.[101]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문화협력 사업 중 동아시아 각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만한 효과적인 협력 분야는 무엇인가? 동아시아 문화협력이 정부 차원에서 머물기보다는 민간 영역, 특히 산업 분야로 확대되어야 지속적인 문화협력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효과적인 산업 분야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동아시아 문화협력과 대중문화

최근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소통을 매개하는 역할로서의 문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102] 한·중·일 3국의 문화시장, 특히, 대중가요 분야에서 이러한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고 있다. 사실 한·중·일 3국이 모두 참여하여 제작한 대중문화 콘텐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 사례로서 2006년 영화 〈묵공〉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일본만화를 원작으로 중국과 한국의 배우들이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한국흥행에는 실패하였다. 이는 국제공동제작이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103] 한류 이전에도 대중문화 차원의 문화교류는 있어 왔지만 주로 한·중, 한·일, 중·일 등 양자적 협력의 구도로 전개되었다. 또한 동아시아 3국의 강력한 민족주의 때문에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한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된 TV프로그램은 민간 차원에서 한·중·일 3국 간에 문화협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Produce 48〉은 한국기업이 제작한 TV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한·중·일의 가수 연습생들이 대거 참여하여 각국에서 큰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104] 한국은 소위 지역 패권국가가 아니기

100) 위의 글.
101) 위의 글.
102) 류시현, "동아시아 문화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 모색- 소통매개체로서의 대중문화의 역할," 『15세기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조망에서 21세기 평화의 해법을 얻다』 (제29차 동북아세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4. 10), p. 52~57.
103) 고정민·이재박·최봉현, 『한·중·일 문화산업교류 확대방안 연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2010), p. 12.
104) 물론 한국이 문화협력을 주도하고 중간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 협력의 이니셔티브가 상호 경쟁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차원, 즉 지역주의 차원에서의 협력을 직접적으로 촉진하기보다는 민간 영역의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의 국익실현 차원에서 성급하게 접근하기보다 지역 전체의 공동이익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때문에 문화협력과 같은 비정치적 분야의 아젠다를 설정함에 있어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류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다른 국가와의 문화협력을 주도하고 설득할 수 있는 우호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한·중·일 3국이 민족주의 정서를 초월하여 대중문화의 융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중국 최대의 게임회사인 텐센트는 2018년 한국의 인기 TV프로그램인 〈프로듀스 101〉 제작사 측과 리메이크 판권 계약을 맺고 〈창조 101〉를 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 전체 시청률 1위를 차지하였으며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 중화권에서 엄청난 화제 속에 방영되었다. 이 경우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 한국인 스태프가 관여한 것은 물론 주제곡의 작곡과 편곡에 한국인 뮤지션이 참여하였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듯이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과 함께 동아시아 3국의 대중문화 협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매우 유망한 협력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대중가요 부문과 드라마 및 영화 부문에서의 대중문화협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2. 동아시아 문화협력과 역사연구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한 분야로 갈등의 소지가 적은 역사적 주제를 선택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물론, 동아시아에서 역사교과서 작업과 같은 사안은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큰 것이 사실이다. 2001년 일본 후소샤의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등장하고, 2002년부터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한국은 일본, 중국 양측과 역사분쟁을 겪게 되었다.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고, 일본 우익이 후소샤 교과서의 채택율을 높이기 위한 운동에 나섰으며, 2006년 일본 정부는 고교 교과서 검정을 실시하며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방적 기술을 주도하기도 했다.[105]

이러한 역사적 분쟁의 와중에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표방한 일련의 공동 역사 교재들이 2005~2006년에 출간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조선통신사』, 『미래를 여는 역사』,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근현대사』, 『마주보는 한일사』 등이 그것이다. 먼저 『조선통신사』는 대구와 히로시마라는 지역적 차원에서 양국의 교사들이 내놓은 결과물로, 자국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상호 비교를 통한 제3의 역사상을 만들어냈다. 『마주보는 한일사』는 지역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전국역사교사

105) 김정인, "동아시아 공동 역사교재 개발, 그 경험의 공유와 도약을 위한 모색," 『역사연구』, 제101권 101호, (2007), p. 35.

모임과 일본의 역사교육자협의회라는 전국 규모의 역사교사 조직이 협력하여 이루어낸 결과물로 근대 이전의 양국 역사를 다뤘다. 참여자들은 역사교사들이었지만 상대 국가의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을 실감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 차를 좁히기 위해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을 나누었다.

앞의 두 경우가 한일 합작에 의한 것이라면 『미래를 여는 역사』는 여기에 중국까지 참여한 경우로, 3국의 시민, 교육자, 학자들이 협업하여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출간한 것이다. 2002년 난징에서 개최된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포럼'에서 3국은 공동 역사교재 발간을 합의하였고 이를 위해 11차례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동아시아 공동 역사교재의 출간은 역사 갈등 해결의 단초를 민간 차원에서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는 제1기 한일공동역사위원회가 실질적 성과 없이 종료된 것과 대비되는 결과였다.[106] 이어진 한국 정부 차원의 조치로서 2012년부터 '동아시아사'가 고등학교 선택과목이 되었다.[107]

공동 역사교과서 작업의 경우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물론 독일·프랑스 관계와 한·중·일 관계는 여러모로 다른 측면이 많기 때문에 독일·프랑스의 성공 사업을 그대로 도입하거나 적용할 수는 없지만 선구적 사례로써 다양한 의미를 새겨볼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2006년 처음 등장한 공동 역사교과서 『역사, 1945년 이후의 유럽과 세계』는 양국이 수십 년에 걸쳐 추진한 화친 정책을 역사교과서 협력 활동을 통해 계승·발전시킨 결과물이다.[108] 나폴레옹 전쟁 이후 2차 대전까지 양국은 네 차례의 전쟁을 치렀는데, 이는 자민족 중심의 편향적 역사관과 역사교육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1920년대부터 프랑스의 라피에르(G. Lapierre), 이삭(J. Isaac) 같은 역사교육자들이 역사교과서 내용을 평화 추구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후 양국의 역사학자와 역사교육 관계자들은 역사교과서 협력 활동을 이어갔다. 그리고 독·불 우호조약 40주년이 되던 2004년 양국 고등학생들이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을 요구하였고 이를 독일의 슈뢰더 수상과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이 받아들였다. 이에 양국의 외교부, 교육부 관료와 학자들로 구성된 역사교과서 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2004년 편찬지침 마련에 이어 2006년 공동 역사교과서가 출간되었다.[109]

이러한 역사교과서의 공동 연구 및 발간은 독일과 프랑스 양국의 청소년들이 2차 대전까지 적국이었던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역사적 성찰을 통해 새로운 유럽정신을 고취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역사인식에 차이가 큰 동아시아에서는 이러한

106) 위의 글, pp. 36~43.
107) 김정현, "동아시아사 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제53호 (2016), p. 269.
108) 김승렬, "역사의 국경을 넘다: 독일-프랑스 공동 역사교과서," 『역사비평』, 82호 (2008), p. 433.
109) 위의 글, pp. 433~438.

역사 공동연구 및 역사교과서 편찬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를 가능케 하려면 먼저 역사논쟁에 휘말릴 소지가 적고 갈등의 개연성이 낮은 일반 민중의 삶을 연구의 시작점으로 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테면, 한·중·일 3국에 걸쳐 활동한 유명한 인물이나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여 문화협력의 좋은 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이다. 먼저 한국인 출신으로 중국에서 활동했던 배우 김염(金焰)의 생애 역시 매력적인 문화협력 소재이다. 김염의 경우 고모 김순애와 고모부 김규식을 비롯하여 가족 대부분이 독립투사로 활약하였으며, 소설가 박규원이 그의 생애를 소재로 『아주 특별한 올드 상하이 20세기 초 동양의 파리, 상하이의 전설과 신화를 찾아서』라는 소설을 저술하기도 하였다.[110]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덩리쥔(鄧麗君)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덩리쥔은 대만 출신이었지만 중국 대륙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덩샤오핑과 시진핑 등 역대 지도자들조차 덩리쥔의 팬이었으며 북한에서도 덩리쥔 관련 우표가 발행된 적이 있고 한국어로 번안된 곡들도 다수 있어 한·중·일 3국뿐만 아니라 북한까지 아우를 수 있는 흥미로운 소재이기도 하다.[111]

일본의 경우 히트곡 〈야래향(夜來香)〉을 부른 가수 야마구치 요시코(山口淑子)의 생애를 들 수 있다. 야마구치 요시코는 만주에서 출생하여 중국 민중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으며 김일성이 그녀의 음악을 좋아했다는 이야기까지 있다. 요시코의 일생은 일본과 중국에서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된 바 있으며 2007년 일본 도쿄 TV에서 드라마로 방영된 적이 있다.

김염, 덩리쥔, 야마구치 요시코의 경우 역사적으로 비중이 큰 인물들은 아니지만 한·중·일 3국이 관련된 역사적 소재이며 갈등의 소지가 적은 '덜 민감한' 소재이기 때문에 공동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꼭 유명한 역사적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보다는 일반 민중들이 겪어야 했던 공통적인 애환과 고난에 초점을 맞춘 공동연구는 동아시아 문화사에 있어서 또 다른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동아시아 문화협력과 관광산업

한·중·일 3국은 경제·지리·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간 이동 또한 잦아 관광교류협력이 중요한 사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먼저 한·일 간 관광 교류를 살펴보면 한국과

110) 박규원, 『아주 특별한 올드 상하이 20세기 초 동양의 파리, 상하이의 전설과 신화를 찾아서』 (서울: 프리이코노미라이프, 2016).
111) 한국주재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과의 자문인터뷰 (2018.8.4, 서울클럽).

일본은 1998년 한·일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관광교류 및 협력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02년에는 '한·일 국민 교류의 해' 사업이 결정되었다. 2004년 7월 22일에 개최된 제1회 한·일 관광장관회의에서는 양국 간 관광교류 확대에 관한 한일관광담당대신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으며, 양국 국교정상화 20주년이 되는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고 한·일 공동방문의 해를 동시에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다. 2017년 기준,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수는 231만 1,447명으로 이는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17.3%를 차지한다(〈표 1〉 참조). 일본은 방한 관광시장 제2위 국가이며, 2013년 이후 한국 방문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감소율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 중국과 일본 관광객 입국현황

(단위: 명, %)

국적	외국인 관광객 수		성장률	구성비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중국	8,067,722	4,169,353	-48.3	46.8	31.3
일본	2,297,893	2,311,447	0.6	13.3	17.3

〈출처: "2017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p. 31〉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은 2008년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관광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의 협력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한·중 관광장관회의가 2009년 8월 25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렸으며 '한·중 관광 분야 교류촉진'에 대한 추진방안이 논의되었다. 2010년 중국방문의 해, 2012년 한국방문의 해, 2010년 상하이 엑스포, 2012년 여수엑스포 등을 계기로 한·중 양국은 상호 관광교류 사절단 파견, 관광인재 양성프로그램 운영, 상호 출입국 절차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관광장관회담의 정례화가 추진되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서로가 최대 관광객 수출국으로 관광교류 규모가 아시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416만 9,353명으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31.3%나 된다(〈표 2〉 참조). 중국은 2013년부터 한국의 제1의 인바운드(외국인이 한국에 오는 경우) 시장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그 수치에 있어서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2017년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이 자국민에게 한국 여행을 금지하면서 중국인 방문객이 줄어들었으나 최근 규제가 완화되는 등 다시 회복세에 있다.

〈표 2〉 연도별 한·중·일 관광교류표

(단위: 만 명, %)

구분	한중	한일	중일	계	성장률
2011	495	641	470	1,606	-3.0
2012	691	556	494	1,741	8.5
2013	830	520	419	1,769	1.6
2014	1,031	504	513	2,048	15.7
2015	1,043	584	749	2,376	16.1

〈출처: "한·중·일 관광교류 현황(2016.2.)," 『투어고포커스』, 제201호 (2016), p. 1〉

한편, 한·중·일 3국의 관광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9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11개 우선협력 분야 중 하나로 관광 분야를 선정하면서부터다. 이후 2000년 1차 APEC 관광장관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었으며 아·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이행계획 및 민·관 분야의 협력 강화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2006년부터는 한·중·일 3국 관광장관회의가 개최되어 3국의 관광교류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2018년 제8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서는 3국을 하나의 여행목적지로 새롭게 구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쑤저우 선언'이 발표되었다. 3국은 △비자 및 통관 간소화 △각국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 △청소년 교육관광 확대 △3국을 공동 여행지로 묶는 '동아시아 방문 캠페인'(Visit East Asia Campaign) 추진 등에 합의함으로써 한·중·일 관광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동아시아 관광협력은 지역정부 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동북아 지사·성장회의'이다. 1994년 시작된 이 회의는 한국 강원도, 러시아 연해주, 일본 돗토리현, 중국 지린성, 몽골 튜브아이막 등 5개 지역정부로 구성된 협의체로, 관광교류가 주요한 사안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2013년 제18차 회의에서 각 지자체는 관광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름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서로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동북아 지사·성장회의'는 국가 간 갈등을 넘어 지역정부 차원의 성공적 국제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동아시아 관광협력 실태를 통해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한·중, 한·일, 중·일과 같은 양자적인 협력은 이미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으며 한·중·일 3국 간의 관광협력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한·중·일 3국이 관광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려는 배경에는 관광수입의 확대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셋째, 양자적인 역내 관광 상품을 넘어 3국이 하나로 연결되는 공동 관광 상품이 기획 및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3국이

하나의 여행 목적지로 구성된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공동의 마케팅을 추진한다면 경제적 이익은 물론 문화협력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4. 동아시아 문화협력과 교육협력

동아시아 문화협력에 있어서 교육협력은 청소년 교류 사업과 대학 간 교류사업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어 동아시아 교육협력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1963년에 세워진 '독일-프랑스 청소년교류 사무국'은 프랑스와 독일 양국의 청소년들의 교류를 통해 2차 대전까지 적국이었던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였다.[112] 상대방 국가를 방문하고 체류하는 경험이 양국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개방적 시각을 갖게 하고 타인에 대한 관용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프로그램이 성공하면서 사무국은 독일과 프랑스는 물론 유럽연합 국가들을 포괄하고 나아가 아프리카, 중동 등 인근 국가의 청소년까지도 포함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그 외연을 확장하였다. 그 결과 주변 국가에서는 '독일-프랑스 청소년교류 사무국'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과 기구들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이 사례가 청소년 교류에 있어 성공이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113]

한국과 주변 국가들은 독일-프랑스 청소년교류 사무국에 준하는 조직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한국 정부 차원에서 여러 경로로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는 국가 간 청소년교류, 한중 청소년교류, 국제회의행사 참가단, 청소년 해외 자원봉사단, 한·중·일 청소년우호만남 등을 운영하고 있다.[114]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은 한·일 교육교류, 한·중 교육교류, 교원 해외파견, 한미 대학생 연수, 제2외국어 교원 국외연수, 해외 현지학교 한국어 교원파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115] 민간 차원에서는 사단법인 한일협회가 일본의 히로시마국제교류센터와 함께 한일청소년 교류 사업을 2012년에 실시한 사례가 있다.[116]

다음으로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Erasmus Program)이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시작된 유럽연합의 이 프로그램은 2014년 '에라스

112) 참고로 황선혜는 "독일-프랑스 청소년교류 사무국"이라는 명칭으로 번역한 반면 김승렬은 "독·불 청소년교류원"으로 번역하였다. 황선혜, "독일-프랑스 청소년 교류가 동북아에 주는 시사점," 『EU연구』, 제19호 (2006); 김승렬, "역사의 국경을 넘다: 독일-프랑스 공동 역사교과서," p. 435.
113) 독일-프랑스 청소년교류 사무국, 〈https://www.fgyo.org/the-institution.html〉 (검색일: 2018.10.31.).
114)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http://iye.youth.go.kr/iye/pgif/odi/view.do〉 (검색일: 2018.11.1.).
115) 국립국제교육원, 〈http://www.niied.go.kr/user/nd75863.do〉 (검색일: 2018.11.1.).
116) 사단법인 한일협회, 〈http://www.koja.or.kr/renewal/02_business/business_05.jsp〉 (검색일: 2018.11.1.).

무스 플러스'(Erasmus+)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에라스무스 플러스는 교육, 청소년, 스포츠 등 유럽연합의 대학 간 교류 전반을 결합하여 확대 편성한 것이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은 사업 첫 해에 3,244명의 학생이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유럽 학생 인구의 거의 1%인 1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지금까지 총 300만 명이 넘는 유럽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개방적 시각을 갖게 되었고, 유럽통합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고취되는 기회로 활용되었다.[117]

동아시아에서도 대학 교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소재 유명대학들은 대학별로 자매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를테면 수도권 소재 대부분의 대학들이 국제교류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다양한 상호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기 보다는 학생들의 수요와 학교 여건에 맞추어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 교육협력과 관련하여 고무적인 사실은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동아시아 대학교류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명 동아시아판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으로, 유럽연합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본떠서 만든 교류프로그램이다.[118] 이 프로그램은 한·중·일 대학 간 학생교류 및 공동·복수학위 제도 활성화를 통해 3국의 상호 이해 증진 및 고등교육 협력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① 공동·복수학위 활성화를 위한 대학 간 협력 및 공동교육과정 개발, ②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통한 다양한 학생 교류, ③ 한·중·일 3국 공동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단 프로그램 질 제고, ④ 우수사례 발굴 및 참가학생 사후관리를 통한 국내외 홍보 강화 등이 있다. 한·중·일의 총 40개 대학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은 전체 17개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 정부가 학생교류 및 프로그램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중 하나는 한국의 성균관대학교, 중국의 지린대학교, 일본의 오카야마 대학교가 함께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먼저 성균관대 동아시아 학술원과 국문학과는 장기교류 24명, 단기교류 16명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는데, 차세대 인재 양성을 통해 동아시아 현안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하고 동아시아 고전학 연구를 활성화하여

117) 1986년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최초로 제안되었을 때 회원국들의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지만(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 지금은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전 세계 37개국에 걸쳐 4,000개 이상이 존재한다. 2012~2013년에만 27만 명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2012년도 유럽 출신의 졸업생 중 5%가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경험하였다. 대부분의 유럽의 학생들은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기회를 가진다.

118) 동아시아 3국 정부가 학생교류 및 프로그램 개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참가학생에게 '국가장학생'에 준하는 혜택을 준다. 2012~2013년도에 고려대학교, 동서대학교, 부산대학교, KAIST, 서울대학교 화학부·경영학부·국제대학부, KDI, 성균관대 문과대학 동아시아 학술원·법과대학까지 총 10개의 사업단이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동아시아적 문화 공동성을 모색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119] 또한 '동아시아 현대의 고전', '동아시아의 상호 소통과 한자문명', '동아시아 고전학 입문' 등의 강의를 개설하였으며 문과대 안에 캠퍼스 아시아 사무국을 설치해 파견학생 교육 및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협력의 다양한 분야 가운데 교육 협력이 더욱 중요한 까닭은 지역 정체성 및 공감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성세대보다 청년세대가 이웃 나라를 방문하며 문화적 체험을 하고 직접 소통의 기회를 갖는 것이 미래의 지역 공동체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및 대학생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기타 문화협력 분야

동아시아의 예술부분 협력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업으로는 '베세토 페스티발'(BeSeTo Festival)이라는 정례적인 연극축제가 있다. 1994년 한·중·일 3국의 연극인들이 뜻을 모아 창설한 베세토 연극제는 매년 3국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베세토'란 명칭은 중국의 베이징(Beijing), 한국의 서울(Seoul), 일본의 도쿄(Tokyo)에서 앞 글자를 딴 것으로 3국의 교류협력 의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 문화 축제의 목표는 한·중·일 3국이 상호 교류를 통해 공연예술의 창작정신을 고무하고 동양연극의 미학적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있다. 2015년 베세토 페스티벌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 제작한 〈태풍기담〉을 상연하였는데, 셰익스피어의 명작 〈템페스트〉를 1920년대 동아시아를 배경으로 새롭게 각색하여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모색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동아시아 예술협력 프로그램으로는 2014년 LIG문화재단의 국제교류 지원 사업으로 출발한 'PLAN-Co.'를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의 동시대 예술가들의 초국적 협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존의 미래를 구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부산과 후쿠오카의 예술가들이 한데 모여 국경, 언어, 문화를 뛰어넘는 공동 리서치 프로젝트 〈소리, 소문도 없이〉를 추진하였는데, 부산과 후쿠오카의 일상 속에 떠도는 소문을 조사하여 무용, 연극, 음악, 미술, 영상, 사진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표현한 흥미로운 프로젝트이다. 이외에도 2018년 11월 9일에는 중국국제방송국 주최로 국내외 예술가들이 '화이부동(和而不同)-동북아서화전'을 개최하여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일본 예술가 16명과 중국 예술가 20여 명이 참여한 이 교류회는 유교문화권에 있는 중국과 일본, 한국, 북한, 몽골 예술가들에게 교류의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취지가 있다.

---

119) "동아시아 삼국 캠퍼스 연합," CAMPUS ASIA in SKKU, 〈http://campusasia.tistory.com/9〉 (검색일: 2019.1.31.).

그러나 예술 분야의 동아시아 문화협력은 아직까지 개별국가 단위의 교류에 국한되거나 민간단체들이 주관하는 일회성 이벤트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술 분야의 문화협력은 타 분야에 비해 정치적 민감성이 덜하기 때문에 동아시아 정체성 구축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동아시아가 초국적 예술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제도 및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도시협력 사업도 주목할 만한 사업이다. '동아시아문화도시' 프로그램은 한·중·일의 문화부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문화예술발전을 지향하는 도시를 선정하여 여러 문화예술 행사들을 개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전까지 3국의 도시협력은 한·일, 한·중, 중·일 형태의 양자 교류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내용 면에서도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3국의 지자체 간 자매 도시결연사업의 경우 도·시·구별 양적 수치는 컸으나 주로 공무원 교류나 일회성 방문 행사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자매협정 체결 이후에도 특별한 사업이 지속되는 경우가 드물어 구체적인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120]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 내 상호 이해와 연대감 형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동아시아 문화협력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주나 일본의 교토, 중국의 시안과 같이 역사적, 문화적 자산이 풍부한 도시들이 도시교류 사업을 활성화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 3개 도시는 사실상 각국의 문화수도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에 성공적인 문화교류 사업은 동아시아 관광산업의 촉진은 물론 문화협력의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제 2 절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효과와 추진 방향

동아시아 각국이 지역 협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양차대전을 겪은 유럽과 달리 임진왜란이나 한국전쟁 외에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개입된 대규모 전쟁의 피해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다시는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집단적 성찰의 부재로 이어졌다. 물론 동아시아 지역도 19세기와 20세기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제국주의 침탈과 2차 대전의 참혹한 피해를 겪었지만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 공동안보를 갈망하게 된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쟁의 비극에

120) 이강욱·이효선, 『한·중·일 국제관광협력 방안연구』, p. 29.

대한 공통된 성찰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동아시아 문화협력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유럽에 비해 근대화 과정이 늦었던 한·중·일 모두 민족주의적 정서가 과거 근대 국가적 지배이념으로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지정학적 구도와 민족주의적 경계가 서로 어느 정도 상호 수용적인데 비해서 역사적으로나 인종적으로 오랫동안 민족주의 정서가 국가의 지배이념으로 고취된 동아시아 지역은 강력한 배타적 민족주의가 지역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타적 민족주의 정서는 오랜 기간 국가주의적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종의 민족적 정체성 문제로 굳어졌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3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상이한 특징을 지닌다. 유교문화권, 한자문화권이라는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는 문자와 문법체계가 서로 달라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상생활의 문화규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121] 유학의 발달로 문관중심적 문화를 발전시켜온 중국, 한국과 달리 일본은 사무라이 전통과 무력의 지배에 근거한 무관중심적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또한 종교·문화적으로도 도교사상과 불교전통에 뿌리를 둔 중국, 불교의 흥성 못지않게 기독교 중심으로 발전해온 한국, 신토이즘에 기반을 둔 샤머니즘적 일본의 문화는 상이한 지점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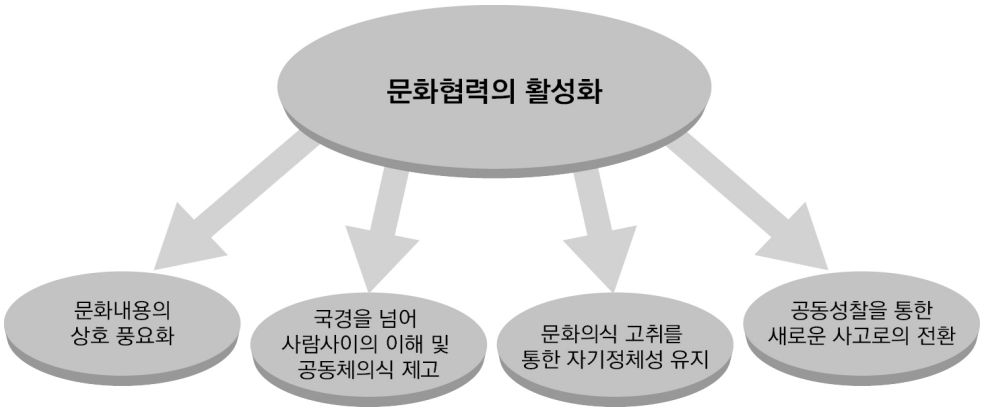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차이와 다양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3국이 문화협력을 가시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구성주의 시각에서 보면 문화적 규범이나 행동양식과 같은 것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성주의에 따르면 지역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국가 간 협력은 물리적인 힘보다는 이념이나 규범에 영향을 받는다. 동아시아 각국의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이 자주 만나 교류한다면 상호 이해가 증진되는 것은 물론, 집단적 정체성 마련을 통한 상상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신뢰 구축과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122]

문화영역에서의 국제협력은 국가들의 행태를 규율하는 국제규범을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협력을 실현할 수 있다. 문화는 인간의 행동을 규율하는 규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화는 대립적 혹은 비협력적인 인간 집단들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상호 협력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상호 대립적인 동아시아의 국제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문화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현재의 동아시아 여건과 현실을 고려할 때 정치나 경제 영역보다 문화 영역의 협력이 훨씬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121) 고정민·이재박·최봉현, 『한·중·일 문화산업교류 확대방안 연구』, p. 184.
122) 이강욱·이효선, 『한·중·일 국제관광협력 방안연구』, p. 9.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협력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의 초석을 만드는데 문화협력의 심화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먼저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문화협력의 심화과정은 역내에 (가) 상호풍요화 효과, (나) 국경을 넘어 사람사이의 이해와 공동체 인식 제고 효과, (다) 문화의식의 고취를 통한 자기 정체성의 유지 효과, (라) 공동 성찰을 통한 새로운 생각과 사고로의 전환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림 1] 동아시아 문화협력 추진 방향



1. 문화내용의 상호풍요화 효과

문화교류의 특성은 문화적 공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적 장점과 특이성을 배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발전시키는 '상호풍요화'(inter-fertilization) 효과에 있다. 곰페르즈라는 영국인 도자기 수집가에 따르면 시대별로 중국의 송·청 청자와 한국의 고려청자를 비교하여 관찰한 결과, 두 나라의 작품이 서로 모방하면서 점차 더 높은 경지로 발전하는 상호풍요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123] 이것은 한·중·일 3국 간 문화협력과 문화산업교류가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문화협력은 마치 자유무역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혜택이 되고 서로의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의 상호풍요화가 향후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지향점이자 비전으로 설정된다면 협력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기본적인 원칙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3) 라종일, "공동체 시대," 『세계일보』, 2010.6.14.; Chewon Kim and Godfrey St. G. M. Gompertz, *The Ceramic Art of Korea,* p. 222.

2. 국경을 넘어 사람 사이의 이해와 공동체적 인식 제고

문화교류는 서로 다른 사회의 사람들이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동질감을 갖게 한다. 인간은 문화적 교류를 통해 인지적·정서적 공감능력을 발전시키기 때문이다.[124] 즉 문화의 기능은 점진적이긴 하지만 사람의 공감능력에 작용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해와 공동체적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20세기 이래 헐리우드에서 생산된 미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문화의 힘이 정치나 경제의 파급력 못지않게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문화교류는 일방의 영향력이 교류 당사자 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양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협력의 가장 큰 의의는 지역의 대중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문화교류의 막대한 영향력이 동아시아 지역 구성원의 정서와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통의 운명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문화의식의 고취를 통한 자기 정체성의 유지

동아시아 문화협력은 세계화의 격랑 속에 각국이 문화 정체성을 지키고 보존하며 이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민족이 근대화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협력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국의 문화적 자산을 풍요롭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문화의 생존과 번성은 결국 힘과 영향력의 문제이며, 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 확고한 지지 기반을 구축해놓지 않으면 서구의 문화적 위상 앞에 쇠퇴할 우려가 있다. 자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문화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문화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4. 공동 성찰을 통한 새로운 사고로의 전환

유럽 통합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외교관 쟝 모네(Jean Monnet)에 따르면 "유럽 통합 운동이 지향한 것은 국가의 통합이 아니라 사람의 통일이다."[125] 서구의 근대화 과정을 살펴보면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많은 문화적 업적을 이룩하도록 기여하기도

124) Jong-yil Ra, "Soft Side of Security Community in Northeast Asia,"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32, no. 1 (2018), pp. 71~82.

125) 쟝 모네가 1952년 4월 30일 미국 워싱턴 DC '전국언론인클럽'(National Press Club)에서 연설할 당시에 언급했던 것으로 지금까지도 유럽통합의 정신을 논의할 때 자주 인용된다. "Allocution de Monsieur Jean Monnet au National Press Club, Washington, 30 Avril 1952," (Speech by Mr. Jean Monnet at the National Press Club, Washington DC, 30 April 1952) 〈aei.pitt.edu/14364〉 (검색일: 2019.1.31.).

했지만, 한편으론 패권을 추구하는 전쟁을 일삼아 자국, 타국을 막론하고 사람의 안전에 가장 큰 파괴자로 작용하기도 했다. 양차대전 이후 유럽은 다시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성찰에 힘입어 궁극에는 유럽통합을 이루었다. 전쟁의 비극이 유럽인들로 하여금 전쟁에 반대하는 공통된 성찰과 문화적 공감을 확산시켰고 이는 국가주의 또는 폐쇄적 민족주의를 제어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비록 동아시아는 공통의 전쟁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화협력을 통해 역내 공통의 규범과 윤리의식을 형성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을 가로막는 민족주의의 장벽을 허물어야 할 것이다.

제5장 동아시아 문화협력체 추진방안과 로드맵

제5장 동아시아 문화협력체 추진방안과 로드맵

동아시아 문화협력체의 추진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기존의 엄격한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잣대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론을 종합하여 선택하는 '전략적 선택주의' 관점을 택하고자 한다. 즉 지역협력의 구상에 있어서 현실주의 이론이 강조하는 특정 국가의 선도적 역할,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강조하는 효율적인 제도의 확립, 구성주의 이론이 주장하는 지역 정체성의 형성을 선택적으로 수용해 지역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먼저 본 연구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문화협력 구상에 국가적 차원의 합의 도출과 적극적 역할에 주목한다. 후술하겠지만 본 연구가 한·중·일 3국정상회의의 역할을 중시하며 한국의 문화이니셔티브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다음으로 자유주의가 강조하는 효율적인 제도의 확립을 위해 처음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협력보다는 역내 지역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중·일 중심의 협력을 활성화한 다음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모색한다. 특히 냉전의 고도(孤島)처럼 고립되어온 북한과 극동 시베리아지역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까지 모두 연결하는 포괄적 문화교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먼저 한·중·일 3국의 문화협력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구성주의가 강조하는 지역공동체적 인식 형성을 위해 문화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비전, 방향, 주요 원칙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1 절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비전과 추진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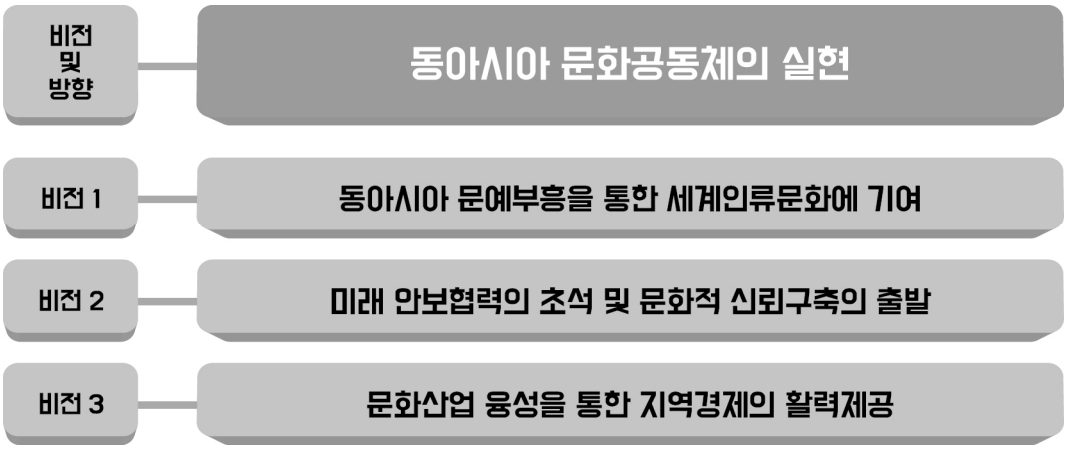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화협력은 문화내용의 상호풍요화 효과, 국경을 넘어 사람 사이의 이해와 공동체적 인식 제고, 문화의식의 고취를 통한 자기 정체성의 유지, 공동 성찰을 통한 새로운 사고로

의 전환 등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지역 내의 문화적 협력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협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전과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까? 동아시아 문화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역내 모든 국가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만한 공동의 가치가 비전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1. 비전

동아시아 문화협력에 대한 비전 제시는 왜 동아시아 각국이 문화협력을 지향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명분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문화협력의 기대효과와 동아시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한 성찰, 동아시아 민중들의 애환과 고뇌, 각국의 상호 인식 등을 토대로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비전을 도출하면 아래 [그림 2]와 같이 △동아시아 문예부흥을 통한 세계 인류문화에 기여 △미래 안보협력의 시작이자 문화적 신뢰구축의 초석 △문화산업의 융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제공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림 2] 동아시아 문화협력체의 비전과 방향



가. 동아시아 문예부흥을 통한 세계 인류문화에 기여

급격한 세계화의 진행과 서방문명의 영향 때문에 세계 각 지역의 독특한 고유문화와 업적이 점차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며 동아시아 지역 역시 예외는 아니다. 동아시아는 서구 문화의 패권적 위상과 영향력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고유문화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이를 인류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차원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서구 발 근대화의 도전에 직면하여 동아시아의 3국은 각기 중체서

용(中體西用), 동도서기(東道西器), 화혼양재(和魂洋材) 등의 기치를 내걸고 자국의 문화를 지키면서 새로운 물결에 대응하려 하였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얼마만큼의 성공을 거뒀는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문화의 상당부분이 소멸된 것 또한 사실이다. 동아시아는 이제 근대화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세계와 인류 사회에 새로운 문예부흥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미래 안보협력의 초석 및 문화적 신뢰구축의 출발

18~19세기 근대화 과정에서 유럽문명에 뒤처진 동아시아 지역은 19세기 후반 유럽제국주의 침탈과 폭력에 시달리며 질곡의 역사를 경험하였다. 급속한 산업화의 성공으로 경제적 활력을 되찾으며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역내 국가들은 심리적 거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의심과 경계심, 불안과 반목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유네스코헌장 전문에 있는 구절, "전쟁은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하므로 평화의 추구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는 말처럼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문화이므로 문화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내국가 간의 화합과 평화의 추구에 있어야 한다.[126] 유럽 문화협력의 토대를 닦은 유럽문화재단(European Cultural Foundation)의 공식적인 비전 역시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거나 사회적 발전을 저해하는 분열적인 요소를 극복하는 데" 있다.[127] 동아시아 문화협력체의 비전 역시 과거 빈곤과 분쟁의 대명사였던 동아시아 지역이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거듭나는데 있어서 미래 안보협력의 시작이자 문화적 신뢰구축의 초석으로 작용해야 한다.

다. 문화산업 융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 제공

동아시아 문화협력체 안에서 이뤄지는 연구나 논의들은 이 지역의 문화 산업에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 차원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늘날 문화 산업의 위력은 실로 막강하다. 미국의 전 세계적 영향력에는 문화 산업의 힘이 큰 비중을 차지함을 볼 때 이를 알 수 있다. 동아시아 문화협력체 기획이 문화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될 경우 문화협력체는 적극적인 대중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더욱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문화산업은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각국의 참여를 보다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 문화 산업은 군수

126) UNESCO Constitution, "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fenc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 〈http://www.unesco.org/education/pdf/UNESCO_E.PDF〉 (검색일: 2019.1.31.).
127) European Cultural Foundation, 〈www.culturalfoundation.edu/about-us/〉 (검색일: 2019.1.20.).

산업을 능가할 만큼 그 경제적 잠재력이 막대하며 관광객 유치와 같은 2차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문화협력체의 성공을 더욱 확고하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128]

2. 추진 원칙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된 비전을 추진하는 기본 원칙의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역내 문화적 통일성의 지향보다 다양성을 통한 창의적 문화지향 △문화적 우월주의 지양 및 평등주의적 문화협력 지향 △문화의 상호풍요화를 통한 호혜적 문화소통 지향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동아시아 문화협력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가. 역내 문화적 통일성의 지향보다 다양성을 통한 창의적 문화지향

동아시아 문화협력은 역내 국가들의 문화적 동질성을 강화하고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각국의 상이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문화적 통일성을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가 이질적이라 하더라도 서로의 문화적 특성을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상호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동아시아 문화협력체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문화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순혈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해외의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여 외국과 공동으로 제3의 문화를 창조할 때 비로소 실체가 분명한 문화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나. 문화적 우월주의 지양 및 평등주의적 문화협력 지향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화협력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선진국이나 후진국으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문화중심국과 문화주변국의 구별 없이 평등주의적 사고로 문화교류와 소통을 해야 한다. 문화 우월주의나 자국중심적 문화인식은 인류문화의 발전적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를테면 중국이 유교문화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국의 문화를 우월하게 생각하거나, 한자는 중국의 문자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이 한자 사용에 반대하는 편협한 사고는 동아시아 문화를 융성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128) 중국 측 관계자인 청도시(青岛市) 문화관 루링(陆玲) 관장은 한·중·일 문화공동체가 결성될 경우 동북아지역 문화산업이 크게 발전하여 세계시장을 석권할 것이며, 문화상품이 일반인에게 전수되어 잘 활용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2018.8.27., 중국 청도).

다. 모든 문화는 혼종문화로써 어떤 나라의 소유물이 아니다. 다른 문화와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동아시아문화를 특정국가의 소유물처럼 다루려는 사고는 피해야 할 것이다.

다. 문화의 상호풍요화를 통한 호혜적 문화소통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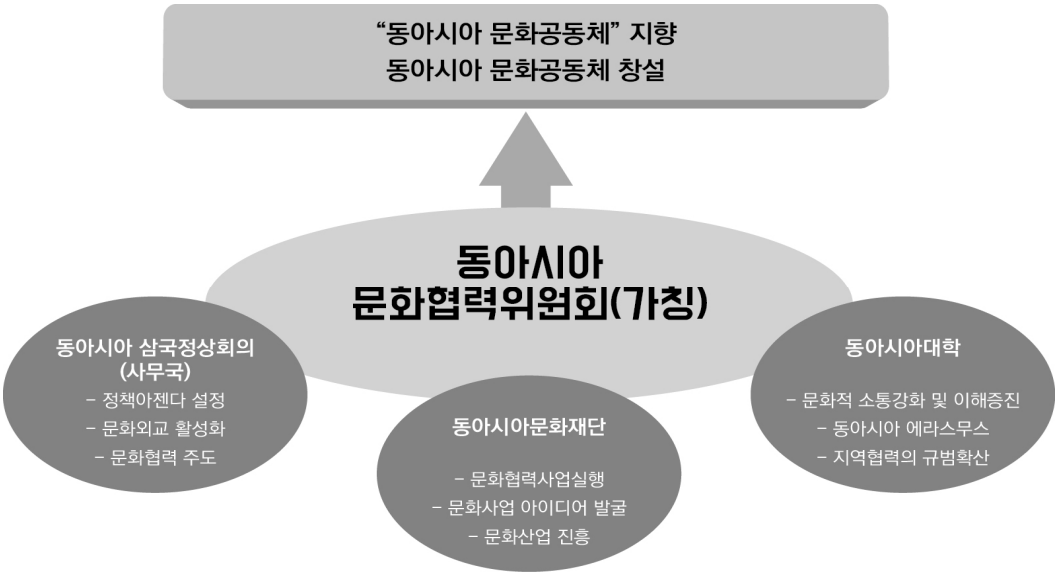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문화적 동질성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유럽이 역사적으로 하나의 단일문화권을 형성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 각국은 공통의 종교인 기독교 문명을 바탕으로 문화를 발전시켜온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단일문화가 아니었으며 각자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발전시켜 왔다. 단적인 예로 언어만 하더라도 유럽연합 25개국에서는 무려 23개 언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민족적 구성 역시 켈트족, 게르만족, 라틴족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의 국가들은 유럽통합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가 문화적 상호수용이라는 점을 인식하였고 왕성한 문화교류를 추진하였다. 동아시아 역시 상이한 문화적 배경을 극복하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발전시켜 문화적 '상호풍요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동아시아 문화협력체의 추진주체와 주요 채널

최근 논의되기 시작한 동아시아 문화협력론의 배경에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안보협력이나 경제협력에 앞서, 먼저 문화적 소통과 공동체 인식의 형성이 중요하다는 자각이 자리하고 있다. 지역경제의 번영을 보장하는 경제공동체론이나 항구적 평화장치를 제안하는 다자안보협력론 모두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적 맥락이나 문화적 이해가 결여된 '희망사항'에 기초하기 때문에 현실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 문화협력이 현실적으로 제도화되고 지속가능한 협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3국 정상회의가 문화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중요하다. 즉 현실주의 국제협력이론이 시사하듯 다자간의 국제협력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국가들의 공식적인 합의기구가 주도적 역할을 맡는 것이 중요하다. 공교롭게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이미 문화협력 분야에서 여러 아젠다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공식 채널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또한 아래 [그림 3]에 나타나듯이 문화협력 관련 제반업무와 사업을 총괄하는 공식적인 상설기구로 '동아시아 문화협력위원회', 문화협력 사업의 아이디어 제시 및 민간 실행기관으로 '동아시아 문화재단', 젊은 세대에게 문화협력의 중요성과 지역공동체 정신을 고취시키는 '동아시아대학' 등이 설립되어 체계적으로 문화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림 3]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추진주체와 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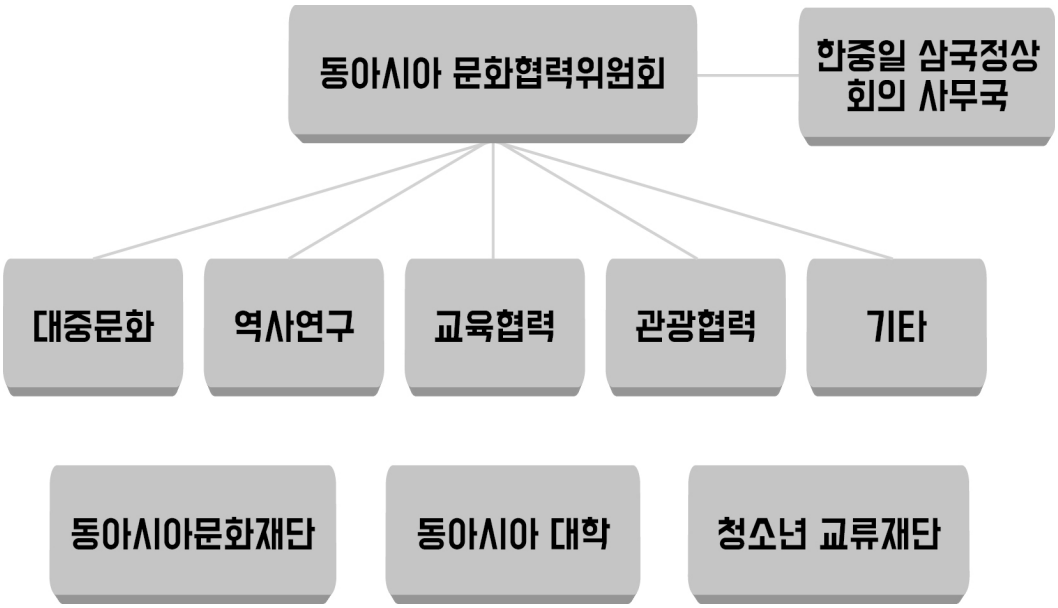


1.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공식주체로서 '동아시아 문화협력위원회'(가칭) 신설

동아시아 문화협력 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동아시아 각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실질적인 문화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할 실무전담기구가 필요하다. 3국 정상회의 사무국은 일정부분 문화교류와 소통의 기능을 하겠지만 상설 전담기구로 삼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보다는, 정부 또는 민간 영역에서 개발된 다양한 문화협력 아이디어를 정책 아젠다로 만들어 사업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행정, 재정 지원체계를 갖춘 '동아시아 문화협력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위원들은 정부 관련 부처 정책실무자들로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을 일정 부분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실질적인 문화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특정국가 출신의 위원들이 위원회의 다수를 구성하는 것은 형평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가별로 위원들의 숫자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문화의 영역이 너무 포괄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구성원들을 대중문화, 역사, 관광, 교육 등의 분야별로 적절히 나누어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문화협력을 활성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그림 4]와 같은 형태의 '동아시아 문화협력위원회'가 신설되어 여타 공식·비공식 기구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림 4] 동아시아 문화협력위원회 조직도



2.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정부 채널로서 '3국정상회의 사무국'의 활용

동아시아 문화협력체의 구상을 담론 수준에서 연구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동아시아 문화협력체 구상이 실제 계획으로 입안되어 단계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중요하다. 이미 한·중·일 3국은 3국 정상회의를 통해 문화교류 사업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3국 정상회의를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공식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후쿠오카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2018년까지 7차례 개최되었는데 문화 분야의 협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표 3〉 참조). 2011년에는 서울에 상설사무국이 설치되었고 다양한 문화협력 사업을 주관하였다. 매년 개최되던 3국 정상회의는 역사교과서 갈등, 영토 분쟁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2년 제5차 회의를 끝으로 3년 간 개최되지 못하였는데, 2015년 제6차 정상회의가 재개되면서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가장 최근에 열린 2018년 제7차 정상회의에서는 △문화 및 스포츠 교류와 협력 증진 △관광교류 촉진 및 청년 교류 확대 △'동아시아 문화 도시 프로그램'을 이용한 도시 간 교류 증진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교류 장려 등에 대한 사안에 합의가 이뤄졌다.

〈표 3〉 한·중·일 3국정상회의 개최 일지

회의	일시	의장국(도시)	참가정상
7차	2018.5.9.	일본(도쿄)	문재인(한), 리커창(중), 아베 신조(일)
6차	2015.11.1.	한국(서울)	박근혜(한), 리커창(중), 아베 신조(일)
5차	2012.5.13.	중국(베이징)	이명박(한), 원자바오(중), 노다 요시히코(일)
4차	2011.5.21.~22.	일본(도쿄)	이명박(한), 원자바오(중), 간 나오토(일)
3차	2010.5.29.~30.	한국(제주)	이명박(한), 원자바오(중), 하토야마 유키오(일)
2차	2009.10.10.	중국(베이징)	이명박(한), 원자바오(중), 하토야마 유키오(일)
1차	2008.12.13.	일본(후쿠오카)	이명박(한), 원자바오(중), 아소 다로(일)

지금까지 동아시아 3국 정상회의가 수행해온 협력활동을 살펴보면 이미 3국의 소통장치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문화협력의 공식적 채널로 활용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에 있는 3국 정상회의 사무국이 문화협력의 실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기보다는 사무국의 창구를 통해 문화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3.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민간 주체로서 '동아시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실질적인 지역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나친 정부개입이나 관주도의 협력이 아닌 민간 영역과 문화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이 촉진될 필요가 있다. 유럽의 경우 유럽문화재단(European Cultural Foundation)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85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창립된 유럽문화재단은 유럽의 문화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추진해왔으며 유럽 내 문화적 소통장치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시기별로는 '유럽문화예술계로의 통합'(1954~1967), '미래지향적 접근방식과 강도 높은 협력 구축'(1968~1989), '문화전문가 중점 지원'(1990~2001), '유럽 문화정책개발'(2002~현재) 등의 아젠다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다.[129]

유럽문화재단은 민간 영역에서의 문화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위해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의 역량강화'(empowering and engaging people through art and culture), '미래를 위한 지식원천 연계'(connecting sources of knowledge for the future), '정책과 실제의 연계'(linking cultural policy and practice)라는 원칙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진행해왔다.[130] 이처럼 민간 문화재단은 시민사회의

129) Anne Marie Autisser, *ECF 50 Years, Sharing Cultures 1954-2004* (Amsterdam: European Cultural Foundation, 2004), p. 3.
130) ECF Annual Report 2013 Summary, 〈www.ecf-annual.org/2013〉 (검색일: 2019.1.22.).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문화 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아시아 문화협력이 활성화되려면 유럽문화재단과 같은 민간 재단의 역할이 필요하다. 유럽문화재단이 유럽사회의 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문화협력의 촉매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던 것처럼 동아시아에도 이와 같이 민간 영역에서 문화협력을 촉진시키고 문화소통의 채널로 작용할 수 있는 동아시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한 것이다. 동아시아 문화재단과 같은 민간 기구는 정부 차원에서 설정한 정책 아젠다를 민간 영역에서 활성화하고, 민간 영역에서 발굴한 문화협력 아이디어를 정부기관에 제안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 재단의 운영은 기업이나 국제 NGO 등 민간 영역에서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커다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동아시아 문화재단의 설립은 3국의 문화협력 및 정책 추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4. 문화협력 심화 및 공동체 의식 고취수단으로 동아시아 대학 설립 및 운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규범은 형성, 확산, 내재화의 단계를 걸쳐 탄생하게 되는데 마지막 단계인 내재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대학(College of Europe)이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유럽대학은 살바도르 데 마다리아가(Salvador de Madariaga),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폴 앙리 스팍(paul Henri Spaak)과 같은 유럽의 지도자들이 2차 대전 이후 유럽협력의 필요성과 유럽통합의 중요성을 교육시키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1949년 창설하였다. 유럽대학의 설립취지는 기본적으로 미래 지도자들이 될 젊은 세대들에게 유럽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문성과 소양을 키우는 것으로, 유럽 경제학, 유럽 국제관계 및 외교, 유럽 법, 유럽 정치 및 거버넌스, 유럽 학제 간 연구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대학이 젊은 세대에게 유럽통합의 정신을 가르치고 유럽협력의 소통장치로 기여해온 것처럼 동아시아 대학 프로그램의 창설과 운영은 동아시아 각국의 학자 및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증폭시킴으로써 하나의 대안적 동아시아 문화와 규범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131] 동아시아 대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자료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먼저 언어 인프라가 갖춰져야

131) 본 연구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중국 청도대학(青岛大学)이 동아시아 대학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 중국 청도 문물국(文物局) 첸치(陈启) 부국장에 따르면 청도대학은 학생 수가 4만 여명에 달하는 큰 규모의 종합대학으로 특히 중국 전통문화 및 민속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해외 대학과도 왕성한 교류를 벌이고 있다. 한편 산동대학 리지시(李济時) 정책학 및 공공관리학원 부원장은 한·중·일 문화공동체가 형성되면 이 기구에 적극 참여하며 3국 문화교류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2018.8.28., 중국 청도).

할 것이며, 한국학 전공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의 기부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해외 유명 대학에서의 일본학 전공을 개설, 운영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기금을 내어놓는 사례가 보편화되어 있다. 한국 기업 역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학의 세계적 확산에 기여하는 것이 결국 기업의 세계적 확장에 포석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132]

또한 동아시아 대학이 본래의 취지인 지역 협력의 정신을 일깨우고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동아시아의 역사와 언어,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은 물론 범 동아시아적 아젠다를 공부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열린 교육과정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자유롭고 심층적인 토론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부과정이 아닌 대학원 대학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고위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을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초기 단계에서는 엘리트 보다 일반 대중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사회문화적 이슈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 3 절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추진전략과 체계

1. 동아시아 문화협력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의미

본 연구는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구상을 좀 더 현실화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면접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특히 중국과 일본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들의 생각을 반영하여 좀 더 실현성이 있는 문화협력방안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지금까지 현지조사 및 면접을 통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중국 측이 동아시아 문화협력 추진에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정책적으로도 이미 추진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었다. 2000년대 초반 한국 측 인사들이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설립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때만 하더라도 중국은 그다지 호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최근 중국의 입장은 매우 전향적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한국보다 한걸음 앞서 나아가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의식한 지역주의 차원의 대응일 수도 있고, 과거 문화혁명으로 인해 소실된 문화유산의 복구노력으로 볼 수도 있다. 어떤 동기가 작용하였든 중국이 이러한 지역 협력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동아시아 문화협력 활성화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133] 특히 중국은 단순한 문화교류와 협력을

132) "한국학 세계화 붐에 비해 질적 수준은 '제자리'," 『한국대학신문』, 2018.5.7., 〈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88792〉 (검색일: 2019.1.31.).

133) 중국 청도시 문화관 루링(陆玲) 관장은 중국이 문화예술 교류 및 사업화에 있어 한국과 일본에게서 많은 것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해 청소년들의 인적 교류확대와 교육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134]

〈표 4〉 한·중·일 문화협력 관련 자문자 명단

	자문자 이름	피면접자 소속 및 직책	면접일 및 장소
1	진옌광(金燕光)	중국 주한 부대사	2018.7.31. (한국, 서울)
2	OOO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 (익명 요구)	2018.7.31. (한국, 서울)
3	루링(陆玲)	중국 청도시(青岛市) 문화관 관장	2018.8.27. (중국, 청도)
4	리궈롱(李国榮)	중국 청도시 문화관 부관장	2018.8.27. (중국, 청도)
5	첸치(陈启)	중국 청도시 문물국 부국장	2018.8.27. (중국, 청도)
6	장딴니(张丹妮)	중국 청도시 취세국제문화전파(聚世国际文化伝播) 유한공사 총경리	2018.8.27. (중국, 청도)
7	옌징송(严劲松)	중국 청도시 해객성문화과기(骇客星文化科技) 유한공사 총경리	2018.8.27. (중국, 청도)
8	리지시(李济時)	중국 산동(山东)대학교 정치학 및 공공관리학원 부원장	2018.8.28. (중국, 청도)
9	마롱지우(马榮久)	중국 산동대학교 정치학 및 공공관리학원 교수	2018.8.28. (중국, 청도)
10	OOO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 (익명 요구)	2018.10.12. (한국, 서울)

동아시아 문화협력에 대해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라면 일본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미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때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추진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일본이지만 미·일 동맹 체제를 거스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일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동아시아 문화협력에 대해 상당한 호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였지만 일부 고위 관료들의 경우 동아시아 문화협력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135] 지금 당장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어렵지만, 문화산업이나 대학교류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일본도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 1995년도에 이미 한국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제안이

배워야 할 입장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2018.8.27., 중국 청도).

134) 중국 청도시 문화관 루링(陆玲) 관장과 리궈롱(李国榮) 부관장은 한·중·일 문화공동체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이것이 문화와 인적 교류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중·일 3국 젊은이들 사이에 이미 상당부분 교류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와 대중교류를 위한 공식 기구를 만드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018.8.27., 중국 청도).

135)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 면담 (2018.10.12., 서울).

나온 적이 있었다.[136] 그러나 당시 유행처럼 번지던 동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상에 밀려 잠깐 뒤로 미루어졌다가 참여정부 시기에 동아시아 문화협력을 제안하는 아이디어들이 다수 나왔으며 최근 다시 인문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137] 한국의 동아시아 협력구상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공통된 접근방법이 전제되어 있다. 그것은 동아시아 협력을 통일의 달성 및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분단국가로서 지역 협력의 목표를 통일 환경 조성에 두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자국 중심의 이익실현에 초점을 둔 협력은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다시 말해, 통일 환경의 조성은 한국만 바라는 것이지 주변 다른 국가들이 바라는 것은 전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동남아시아조약기구(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SEATO)나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ian and Pacific Council·ASPAC)가 모두 무산된 것은 공통된 비전이나 목표 없이 참여 국가들이 국익 실현의 차원에서 지역 협력을 모색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되지 못했다.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분단국가에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이고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일본이나 중국에게도 공감될 만큼 중요한 것인지는 좀 더 숙고해보아야 할 것이다.[138] 동아시아 협력이 장기적으로 통일 환경의 조성이나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런 효과가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정치적 또는 전략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2. 동아시아 문화협력 추진전략과 로드맵

동아시아 문화협력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다. 단기간 안에 성공적인 결실을 보장할 수 없는 거시적인 담론이며 20~30년을 내다보고 추진해야하는 장기적인 플랫폼(platform)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체적인 동아시아 문화협력체 추진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3단계 문화협력의 로드맵을 도출한다. 먼저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환경조성 및 인프라 구축'의 단계에서는 역내 문화

136) 라종일, "신질서와 문화-예비적 고찰," PP. 135~170

137)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역사교과서 개선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 방안' 또는 '한류문화의 확산을 이용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방안',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률적 접근방안', '관광교류와 협력을 통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방안' 등 매우 다채로운 아이디어들이 제기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통일연구원에서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방안'을 발간하였다. 민태은 외,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8).

138) 물론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협력체의 구상이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목표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 지역 협력과 평화를 위한 한국의 의도를 오해하게 만들 것이며 타국의 지지를 받기 어렵게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중국이 동아시아 협력을 추진하자고 하면서 그 목적이 시진핑의 '일대일로'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협력의 본격화를 위한 정치·외교적 기반구축, 문화협력의 제도화에 기여할 상설기구 및 채널 구축, 문화협력의 심화를 위한 아젠다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다음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활성화'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자산의 보존 및 문화가치 발굴 활성화, 문화산업의 발전 및 융성을 위한 기반구축, 문화협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산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실현'으로 나가기 위한 최종 단계에서는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설립에 필요한 정치·외교적 조치와 함께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헌장'을 구상해야 하겠으며 문화공동체의 창설을 위한 행·재정 체계 구축, 문화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정책과제로 정리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동아시아 문화협력 로드맵

〈1단계: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환경조성 및 인프라 구축〉
①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본격화를 위한 정치·외교적 기반구축 가.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비전에 대한 공동합의 도출 나.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기본 방향과 원칙에 대한 의견조율 다.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주요 분야 및 추진전략에 대한 기본 합의
②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제도화에 기여할 상설 기구 및 채널 구축 가. 동아시아 문화협력을 추진할 실무기구 및 공식 채널 구축 나. 동아시아 문화협력을 지원할 민간 기구 및 네트워크 구축 다. 동아시아 문화협력 추진에 기여할 협의체 및 자문기구 설치
③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심화를 위한 아젠다 및 프로그램 개발 가. 동아시아 문화유산 보존의 날 제정 및 공표 나. 캠퍼스 아시아, 동아시아 팝 페스티벌 등 공동 문화 프로그램 개발 다. 매년 정례적인 동아시아 문화 아젠다 및 동아시아 내러티브 구상
〈2단계: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확산 및 공동체 의식의 고양〉
① 동아시아 문화자산의 보존 및 문화가치 발굴 활성화 가. 동아시아 르네상스(문예부흥)의 시작 공표 나. 동아시아 문화자산의 보존 및 교류활동 활성화 다. 동아시아 문화가치의 발굴 및 원형문화 개발
② 동아시아 문화산업의 발전 및 융성을 위한 기반구축 가. 동아시아 문화진흥에 필요한 주요 사업의 개발·추진 나. 동아시아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전담기구 및 공동협의체 설립 다. 동아시아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문화산업 거버넌스 체계 구축
③ 동아시아 문화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산 가. 동아시아 대학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산 나. 동아시아 청소년교류를 위한 재단 및 지원체계 확대 다.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강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확산

〈3단계: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창설〉

①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모태가 될 "동아시아 문화공동체(가칭)" 준비
  가.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기본 틀과 헌장 준비
  나.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설립을 위한 제반 정치·외교적 합의 도출
  다.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추진을 위한 전문 자문기구 설치

②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창설을 위한 행·재정 체계 구축
  가.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공식 추진체계 구축
  나.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다.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

③ 동아시아 문화의 정체성 고취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확산
  가.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한 아젠다의 개발 및 추진
  나. 동아시아 문화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추진
  다. 동아시아 문화공동체의 실현에 필요한 이벤트 및 사업 개발

제6장 결론

제6장 결론

지금까지 학계에 제기된 동아시아 문화협력 방안의 대부분은 정책적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둔 제안이라기보다는 학자들의 희망사항에 근거한 담론 수준의 아이디어에 불과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지나치게 이론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의 여건과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물론 동아시아 문화협력은 여러 한계들을 노정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지나치게 한·중·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여타 지역과의 협력은 아직까지 활발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이 지역 협력을 활성화하는 이니셔티브를 쥔다 하더라도 동아시아 문화협력체가 지역 협력체로서의 대표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여타 국가들을 포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정학적 특성상 지역 협력체를 추진하는데 있어 정치적, 외교안보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적은 분야를 발굴하여 협력을 활성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정세는 최근까지도 미국의 패권적 행태에 크게 좌우될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와 같은 군사안보적 사안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을 사전에 잘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 각국 간의 오랜 갈등의 역사를 고려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소년과 청년 등 미래 세대의 문화적 소통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기관의 활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논의된 여러 가지 제약과 여건 등을 고려하면 동아시아 문화협력은 '공동체'보다는 '협력체'의 형태를 빌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여건이 더 성숙하고 준비된 상황에 도달하기까지 '동아시아 문화협력의 인프라 구축' → '문화협력의 확산 및 공동체 의식의 고양' → '문화공동체의 창설'이라는 전략적 로드맵을 따라 가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역내 문화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는 몇 가지 경계해야 할 중요한 정책방향이 있다.

1. 단기적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문화협력을 창출

동아시아 문화협력을 촉진하고 공통의 문화 규범과 가치를 공유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장기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작은 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여 큰 분야의 협력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단기적인 성과를 강조하다 보면 대중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만을 고집하기 쉽다. 그러나 협력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되는 대형 프로젝트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동아시아 문화협력은 변화의 씨앗을 심는다는 생각으로 작은 분야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화협력을 위한 프로젝트들은 지속가능한 협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한 문화협력 프로젝트들은 짧은 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그 성과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비록 시작 단계에서는 협력의 성과가 다소 작더라도 학습 효과(learning effects)와 확산(spill-over)의 과정을 통해 협력의 영역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가 발생하도록 지속가능한 협력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협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가들과 시민들이 공유하고 준수할 수 있는 협력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협력의 단기적인 성과를 강조하다 보면 종종 협력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결국 지역 국가들과 시민들 사이의 신뢰의 붕괴시키고 궁극적으로 협력 프로젝트 자체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문화협력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국과 시민들 사이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상호 공유하고 인정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들을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준수함으로써 상호 간의 신뢰를 축적할 수 있어야 한다.

2. 지나친 정치적·민족주의적 편향 및 접근방식 지양

그동안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요인은 아마도 역내 국가들 간의 정치적 갈등과 민족주의의 문제일 것이다. 특히 역사적 갈등과 영토 분쟁 그리고 이를 둘러싼 민족주의 감정의 부상과 대립이 지역 내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동아시아 문화협력 프로젝트는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이 적고 공통의 유대감을 창출할 수 있는 문화 분야의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139] 물론 동아시아 문화협력 프로젝트의 궁극적

139) 청도 문물국(文物局) 첸치(陈启) 부국장은 한·중·일이 역사적 관계가 오래되고 깊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기가 쉬워 한·중·일 문화협력체를 구성하기가 비교적 용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화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며 한·중·일이 문화연구, 문화예술 작품활동, 영화 제작, 책 출판 등을 함께 하는 문화 교류가 필요하며 그 결과가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2018.8.27., 중국 청도).

목표는 편협한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지역 국가들 사이의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처음부터 역내 국가들 사이의 협력을 가로막는 민감한 정치적 문제나 민족적 문제를 다룰 필요는 없다. 역내 국가들 사이의 갈등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협력의 경험과 토대를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역사문제는 갈등의 소지가 아무리 큰 분야라 하더라도 역내 문화적 소통과 상호 이해 증진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력이 용이한 사안을 시작으로 역내 국가들 사이에 오랜 협력의 경험이 축적된다면 향후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적, 민족적 문제를 해결하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3. 이론과 현실이 결합된 문화협력의 추구

동아시아 문화협력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원칙과 목표, 비전 등에 대한 확고한 이론적 토대가 필요하다. 만일 문화협력을 위한 노력들이 확고한 분석과 이론적 토대 없이 진행될 경우 그 프로젝트는 방향을 잃고 결국 실패의 길을 걷게 될 수 있다. 물론 지나치게 이론적 토대에만 천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에도 현장으로부터의 요구에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여 결국 실패로 돌아갈 위험성이 높아진다. 결국 문화협력을 위한 노력은 이론적 토대와 현장의 전문성이 적절하게 결합될 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문화협력이 성공을 거두려면 이론과 현장의 유기적인 결합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위원회와 전문자문기구의 효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문화협력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담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위원회 운영을 상시적으로 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자문기구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담위원회나 전문자문기구는 이론적 토대와 현장의 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론가와 현장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문화의 다양성 존중과 창조적 융합 지향

동아시아 문화협력 프로젝트는 지역 내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 포용하고 창조적 융합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동아시아 문화협력을 위한 프로젝트는 어느 일국의 문화를 동아시아 지역의 보편적 문화로 확산시키려는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자칫 역내 국가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심지어는 문화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문화협력 프로젝트는 역내 국가들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연구 작업을 통해, 지역 내의 시민들과 국가들은 상호의 문화를 공유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140]

물론 동아시아 문화협력 프로젝트는 단순히 역내의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다양한 문화를 창조적 융합하고 이를 지역 내 새로운 보편적 문화로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협력체의 핵심 행위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지역 내 국가와 시민들에게 확산·내재화시킬 수 있다면 새로운 지역 내 보편적 문화를 비로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 문화는 다시금 지역 내의 통합과 협력의 토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5. 과거와 전통의 부정이 아닌 창조적 성찰과 현대적 재해석 지향

동아시아 문화협력 프로젝트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전통과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창조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어야 한다. 동아시아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지역이며, 오랜 시간 동안 찬란한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과거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과 계승은 지양하여야 한다. 비판적 성찰이 수반되지 않는 과거와 전통은 새로운 미래 창조의 씨앗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와 전통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이들을 창조적으로 파괴할 수 있어야 한다. 오랫동안 동양문명의 중심을 자처했던 중국은 1960년대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자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상실하고 문화적 자존감도 함께 잃어 버렸다. 중국만큼이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한국도 근대화 과정에서 제국주의 침탈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귀중한 문화유산을 잃어버렸다. 가장 빨리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독특한 자국문화와 전통을 비교적 잘 지켜왔지만 태평양 전쟁의 패배로 피해의식에 빠져 성찰의 여유가 없었다. 동아시아 문화협력체는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조명하며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들이 함께 아우르는 시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과거와 현재가 소통함으로써 창조적 미래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40) 중국 청도 해객성문화과기유한공사 옌징송(严劲松) 총경리는 복장과 음식 문화를 예로 들면서, 동아시아 문화는 큰 방향에서는 같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크게 구별되며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 불통 부분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대중적 풍속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것이 풍부하고 만족스러워야 문화협력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학술적 가치와 함께 실용성의 가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2018.8.27., 중국 청도).

참고문헌

1. 단행본

고정민·이재박·최봉현. 『한·중·일 문화산업교류 확대방안 연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2010.

김광억·전영평. 『동북아 문화 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서울: 통일연구원, 2004.

라종일. "신질서와 문화-예비적 고찰." 안택원 엮음. 『21세기 국제정치이론의 새로운 사고』.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류재택. "역사 교과서 개선을 통한 동북아 국가 상호 이해 증진방안 연구." 『21세기 동북아 문화 공동체의 구상』. 서울: 법문사, 2004.

문인철·이한수·박진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 서울: 국회사무처, 2013.

민태은 외.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8.

박규원. 『아주 특별한 올드 상하이 20세기 초 동양의 파리, 상하이의 전설과 신화를 찾아서』. 서울: 프리이코노미라이프, 2016.

박기홍. "동북아 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광교류 협력방안." 『21세기 동북아 문화 공동체의 구상』. 서울: 법문사, 2004.

박사명. "동아시아 공동체의 의의와 과제."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서울: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2008.

박용덕.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의 구성 및 운영 메카니즘: 다자간 에너지협력체틀과 WTO체제의 조화성을 중심으로』. 서울: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배긍찬.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전개 과정: ASEAN+3 협력체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서울: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2008.

여운형. 『(몽양)여운형 독립운동: 여운형 집필집』. 부천: Bookk, 2018.

이강욱·이효선. 『한·중·일 국제관광협력 방안 연구』. 서울: 한국관광문화연구원, 2008.

이광규. 『동북아문화 공동체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이수훈. "동북아시대론." 한국동북아지식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 서울: 동아일보사, 2004.

이일영 엮음. 『동북아시대의 한국경제 발전전략』. 경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3.

전재경·박정훈·이원우·송영선. 『동북아 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5.

최송화·권영설 엮음. 『21세기 동북아 문화 공동체의 구상』. 서울: 법문사, 2004.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신시대 한일 협력 7대 핵심과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3.

함재봉. 『유교자본주의 민주주의』. 서울: 전통과 현대, 2000.

Breslin, Shaun. "Theorising East Asian Regionalism(s): new regionalism and Asia's future." in *Advancing East Asian regionalism.* eds. M. G. Curley and N. Thomas.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7.

Carr, E. H.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New York: Harper & Row, 1964.

Dent, Christopher. *East Asian Regionalism.*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8.

Deutsch, Karl W. *Political Community and the North Atlantic Area: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Light of Historical Experienc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7.

Finnemore, Martha. *National Interests in International Society.*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Gilpin, Robert. *Global Political Economy: Understanding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_____.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_____. *U.S. Power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New York: Basic Books, 1975.

_____.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Haas, Ernst B. *Beyond the Nation-Stat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4.

_____. *The Uniting of Europ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8.

Huntington, Samuel.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chuster, 1997.

Katzenstein, Peter J. "Introduction: Asian Reg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Network Power: Japan and Asia.* eds. Peter. J. Katzenstein and T. Shiraishi.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_____. eds.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Keohane, Robert O.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_____.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Essay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oulder, Colorado: Westview, 1989.

Keo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World Politics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1977.

Kim, Chewon and Godfrey St. G. M. Gompertz. *The Ceramic Art of Korea.* NY: Yoseloff, 1961.

Kindleberger, Charles. *The World in Depression, 1929-1939.* London: Allen Lane, 1973.

Kroeber, Alfred L. and Clyde Kluckhohn.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es.* New York: Vintage Books, 1952.

Marie Autisser, Anne. *ECF 50 Years, Sharing Cultures 1954-2004.* Amsterdam: European Cultural Foundation, 2004.

Mattli, Walter. *The Logic of Regional Integration: Europe and Beyo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Moravcsik, Andrew. *The choice for Europe: Social purpose and state power from Messina and Maastricht.*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4th edition. New York: Knopf, 1967.

Payne, Anthony and Andrew Gamble. "Introduction: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and World Order." in *Regionalism and World Order.* eds. Andrew Gamble and Anthony Payne. London: Macmillan, 1996.

Thompson, Michael, Richard J. Ellis and Aaron B. Wildavsky. *Cultural Theory.* Colorado: Westview Press, 1997.

Wallace, Helen, William Wallace, and Mark Pollack(eds). Policy making in the European Un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Wallace, Helen. "The Institution of the EU: Experience and Experiments." in *Policy-Making in the European Union.* 3rd edition. Helen Wallace, William Wallace, and Mark Pollack(e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Wendt, Alexander. A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中根隆行. 『“朝鮮.” 表象の文化誌—近代日本と他者をめぐる知の植民地化』. 東京: 新曜社, 2004.

2. 논문

권오윤·沈定昌. “‘협력안보’로서의 동북아 평화협정체제를 만들기 위한 조건들.”『평화연구』. 제15권 1호, 2007.

김범수.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과 세계정치.”『세계정치』. 제18권, 2013.

김상배. “한류의 매력과 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세계정치』. 제28권 제1호, 2007.

김승렬. “역사의 국경을 넘다: 독일-프랑스 공동 역사교과사.”『역사비평』. 82호, 2008.

김정인. “동아시아 공동 역사교재 개발, 그 경험의 공유와 도약을 위한 모색.”『역사연구』. 제101권 101호, 2007.

김정현. “동아시아사 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근현대사를 중심으로.”『동북아역사논총』. 제53호, 2016.

김형국·김석근. “동북아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건과 전망: 문화적 동질성과 다양성 그리고 정체성.”『세계지역연구논총』. 제23집 1호, 2005.

라미경.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과 시민사회: 글로벌거버넌스와 NGO.”『평화연구』. 제15권 1호, 2007.

류시현. “동아시아 문화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 모색-소통매개체로서의 대중문화의 역할.” 『15세기 동북아 평화체제에 대한 조망에서 21세기 평화의 해법을 얻다』(제29차 동북아세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4. 10).

윤황. “동북아 평화협력체제의 형성조건에 관한 연구: 한·중·일 3국의 기본입장을 중심으로.”『평화학연구』. 제7권 3호, 2006.

이철기.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혁의 필요성과 가능성.”『한국정치학회보』. 제28집 2호, 1994.

이혁섭.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21세기적 현실성.”『국제정치논총』. 제36집 3호, 1997.

진행남. “신한류와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JPI 정책포럼』. 제75권, 2011.

최대석. “동북아 지역안보협력체 조성에 대한 미국의 입장.”『국제정치논총』. 제36집 2호, 1996.

최정운. “문화와 권력.”『세계정치』. 제7권, 2007.

허태회. “21세기 동아시아 지역 협력구상: 이론적 탐색.”『지역발전연구』. 제1호, 2001.

허태회. "동북아 경제 협력방안과 한국의 선택: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 『정책연구』. 1997.

_____. "동북아 안보협력 구상과 한국의 선택." 『허재일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1999.

_____. "동아시아의 무역팽창과 국제분쟁: 벡터 자기회귀(VAR)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1호 (1997), pp. 283~293.

황선혜. "독일-프랑스 청소년 교류가 동북아에 주는 시사점." 『EU연구』. 제19호, 2006.

Cox, Robert.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0. no. 2, 1981.

Joing-il, Ra. "Regional Cooperation in Cultural Industries - Toward An Alternative Paradigm in Regional Politics in East Asia." In *Democracy and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Kim Dae-jung Peace Foundation, 1995.

Mansfield, Edward D. and Helen V. Milner. "The New Wave of Reg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3. no. 3, 1999.

Finnemore, Martha and Kathryn Sikkink. "International Norm Dynamics and Political Cha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2. no. 4. 1998.

Haas, Ernst B. "The Obsolescence of Regional Integration Theo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Research Series. no. 25, 1975.

Hansen, Roger D. "Regional Integration: Reflections on a Decade of Theoretical Efforts." *World Politics.* vol. 21. no. 2, 1969.

Hausken, Kjell and Thomas Plümper. "Hegemonic Decline and International Leadership." *Politics & Society.* vol. 24. no. 3, 1996.

Hemmer, Christopher and Peter J. Katzenstein. "Why is There No NATO in Asia? Collective Identity, Regionalism, and the Origins of Multilater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6. no. 3, 2002.

Hurrell, Andrew. "Explaining the Resurgence of Regionalism in World Politic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1. no. 4, 1995.

Hoffmann, Stanley. "Obstinate or Obsolete? The Fate of the Nation-State and the Case of Western Europe." *Daedalus.* vol. 95. no. 3, 1966.

Huh, Tae-hoi. "The Impact of Economic Dynamism upon International Conflict: A Granger Causality Test for Some East Asian Countri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nver. 1995.

Hettne, Björn. "Beyond the 'new' regionalism." *New Political Economy.* vol. 10. no. 4, 2004.

Ikenberry, G. John and Charles Kupchan. "Socialization and Hegemonic Pow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4. no. 3, 1990.

Krasner, Stephen D. "State Power an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rade." *World Politics.* vol. 28. no. 3. 1976.

Lake, David. "Theory is dead, long live theory: The end of th Great Debates and th rise of eclectic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9. no. 3, 2013.

Moravcsik, Andrew. "Preferences and power in the European Community: A liberal governmentalist approach."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 31. no. 4, 1993.

Neumann, B. Iver. "A Region-Building Approach to Northern Europ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0. no. 1, 1994.

Pedersen, Thomas. "Co-operative hegemony: power, ideas and institutions in regional integration."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8. no. 4, 2002.

Ra, Jong-yil. "Soft Side of Security Community in Northeast Asia."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32. no. 1, 2018.

Russett, Bruce. "The Mysterious Case of Vanishing Hegemony; or, Is Mark Twain Really Dead?."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9. no. 2, 1985.

Strange, Susan. "Cave! Hic Dragones: A Critique of Regime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6. no. 2, 1982.

Terada, Takeshi. "Constructing and 'East Asian' concept and growing regional identity: from EAEC to ASEAN+3." *Pacific Review.* vol. 16. no. 2, 2003.

Webber, Douglas. "Two funerals and a wedding? The ups and downs of regionalism in East Asia and Asia-Pacific after the Asian crisis." *Pacific Review.* vol. 14. no. 3, 2001.

Wendt, Alexander.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2, 2000.

_____.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8. no. 2, 1994.

3. 기타자료

YTN 〈https://news.naver.com〉.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http://www.asiaticresearch.org〉.
국립국제교육원 〈http://www.niied.go.kr〉.
뉴시스 〈http://www.newsis.com〉.
독일-프랑스 청소년교류 사무국 〈https://www.fgyo.org〉.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st.go.kr〉.
사단법인 한일협회 〈http://www.koja.or.kr〉.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인민화보 월간중국 〈www.chinacorea.com〉.
자유아시아방송 〈https://www.rfa.org〉.
정책브리핑 〈news.naver.com/〉.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http://www.kr.emb-japan.go.jp〉.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http://iye.youth.go.kr〉.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
한국대학신문 〈news.unn.net〉.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홈페이지 〈kr.tcs-asia.org〉.
헤럴드 경제 〈http://news.heraldcorp.com〉.
UNESCO Constitution 〈http://www.unesco.org/education/pdf/UNESCO_E.PDF〉.
CAMPUS ASIA in SKKU 〈http://campusasia.tistory.com〉.
ECF Annual Report 2013 Summary 〈www.ecf-annual.org/2013〉.
European Cultural Foundation 〈www.culturalfoundation.edu/about-u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 〈http://kr.tcs-asia.org〉.
Wikipedia 〈https://ko.wikipedia.org〉.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01-01

동아시아 문화협력체 추진방안 연구(최종보고서)

발 행 2019년 1월
발 행 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909호
전 화 044) 211-1000
홈 페 이 지 www.nrc.re.kr
인 쇄 처 ㈜아미고디자인 02-517-5043

I S B N 979-11-5567-288-4

* 연구회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